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1

KOREAN

현안 보고서 1



법인세 문제의 해결

왜 기업 과세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가

도입

기업과 고부유층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고 현 세계 경제가 창출하는 부와 권력의 거대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 조세 규칙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고 부자들이 조세피난처에 부를 은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비밀주의는 종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허용으로 다국적 회사와 고부유층들이 회피하는 세금 액수가 충격적인 규모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기득권층들은 많은 돈을 써가며 이 사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부자들은 언제나 규칙의 우회로를 발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실 해답은 이미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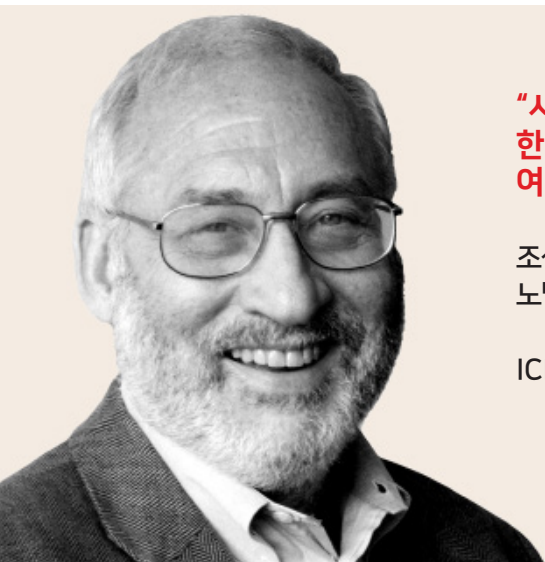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이다.

우리가 부정을 폭로할 때마다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며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전세계의 노조들은 헌신적으로 조세정의 운동과 협력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

본 현안 보고서들은 세계 노동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법인 세제의 개혁 조치를 개괄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개혁 조치로서 노동조합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들을 제시한다.

조세정의 캠페인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노조는 PSI의 대니얼 베르토사나 CICTAR의 제이슨 워드에게 연락해 주길 바란다.

daniel.bertossa@world-psi.org
jason.ward@cictar.org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 요소는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면 세계화는 다국적기업들이 바닥으로의 경주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가능하는 데 필요한 세입을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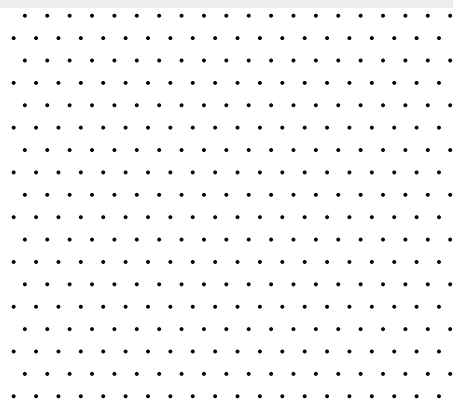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ICRICT 커미셔너

핵심 요구사항 요약

본 현안 보고서들에는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세금 논쟁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일련의 정치적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 요구 중 가장 중요한 16가지를 뽑아 선별한 것이다.

1. 기업 이윤 창출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공식에 기초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2 참조).
2. 공식에 사용되는 요인들에 기초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세율을 채택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2 참조).
3. 기업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여타 국가들과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세율에 합의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4. 재량에 의한 모든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면세 기간, “특허 박스”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위장된 형태의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 판정tax ruling, 그리고 낮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수목적법인 제도 등이 포함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5. 실투자비용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은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입법자에 의해 신중하게 조사되고 대중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6. 쌍방 조세조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가의 기업 소득 과세 권리를 폐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7. 조세 당국이 모든 정부 부처 및 여타 정부 기관과 단체로부터, 또한 경제적 정치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4 참조).
8. 조세 당국이 직원과 IT 인프라의 측면에서 충분한 자원을 갖추는 동시에 조세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과 법적 수단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4 참조).



핵심 요구사항 요약(계속)

9. 조세 당국이 잘 훈련되고 좋은 보수를 받으며 의욕적인 동시에 지지적 근무 조건에서 인 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전문 직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4 참조).
10.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창설하기 위해 ILO의 후원 하에 서 타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 및 물 리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현안 보고서 4 참조).
11. 조세 당국이 그들의 관할 지역에 등록된 모든 기업과 신탁 및 이들의 실소유주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를 보존하고 연간 재무 회계 기록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4 참조).
12. 원천징수세액 인상, 조세피난처의 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거부, 조 세피난처 이용 회사의 공공계약 입찰 금지 등 조세피난처로의 재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조 치를 채택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5 참조).
13. 국제적 모범 사례 기준에 부합하며 개방형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전역 회계와 일치하는 국가별 보고서 발행을 모든 다국적기업들에게 요구해야 한다(현안 보 고서 6 참조).
14. 공통보고기준에 서명한 모든 관할지역이 여타의 관할지역과 조세 정보를 자동적으로 공 유하고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5년의 면제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타 정부와 협력하여 OECD의 공통보고기준을 개혁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7 참조).
15. 체류 기간이 반 년 미만인 개인들이 납세 거주지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돈 을 받거나 한 국가에 대한 투자의 보상으로 영주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현안 보고서 7 참 조).
16. 회사와 신탁, 재단의 최종 실소유자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공개적이 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동시에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검증되어야 한다(현안 보고서 8 참 조).

현안 보고서 1: 왜 기업 과세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가?

해결 과제:

남용되기 쉬운 낮은 제도

세계화의 부가 자신들을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노동자들이 애를 먹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 임금은 정체되고 공공 서비스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으며 불평등은 증가했다. 최근에 일어난 내부유출과 스캔들 속에서 잃어버린 수수께끼의 조각이 밝혀졌다. 많은 다국적 회사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정부의 자발적 도움을 받는다.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를 전세계의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그 결과 사적 이윤은 더욱 커지는 반면 학교, 보건 의료, 공공 주택 및 운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더 많은 세금이 노동자와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진다. 이렇게 부는 노동자와 빈곤층으로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과 사람들에게로 옮겨진다.

기업이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겨난다. 그들의 이윤은 어디에서 과세되어야 하는가? 지난 세기초 정부들은 한 기업을 구성하는 상이한 부분들을 마치 공개 시장에서 상호 교역하는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다룸으로써 이같은 물음에 답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소위 "독립기업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이다.

보다 단순했던 세계에서 설계된 이러한 해법은 오래 전에 그 기능을 멈추었다. 다국적기업들은 회계 속임수를 사용하여 이윤을 사업 수행 국가에서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독립기업 원칙을 활용하는 법을 익혔다. 이러한 수법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되

며 기업의 회계사들과 변호사 군단에 의해 방어된다. 업무가 과중한 조세 당국은 이러한 수법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고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국적 기업의 회계장부를 열어봄으로써 문제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목록에는 통상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카리브해 제도나 영국 해협, 또는 미 델라웨어주의 회사들이 포함될 것이다. 대다수의 이들 자회사는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으며 대개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들의 목적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기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너무나 다반사여서 IMF 연구진에 따르면 전세계 해외 투자의 40% 가량은 실제로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진 "유령" 투자에 해당한다.

장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관행으로 발생하는 연간 국고 세입 손실액은 6,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이 특히 위험에 처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지만 과세할 실물을 거의 또는 전혀 보유하지 않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과 같은 디지털 시대 회사들의 출현으로 제도의 결함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바닥으로의 경주

관련된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국가들이 세제 혜택이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이다. 한 국가나 영토가 해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때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이윤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는 모든 국가의 세입이 희생되면서도 투자와 일자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 바보들의 게임이다.

그 논리는 노동권과 임금, 노동조건을 둘러싼 “바닥으로의 경주”와 동일하다.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희망으로 기준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정부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공적 지출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를 따낼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법인세 감면과 이윤의 “역외 이전”은 1980년대 이후 노동의 희생 속에서 자본에게 더 큰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환의 일부이다. 이윤이 역외로 이전될 때 회사는 임금 단체 교섭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다고 주장할 수 있다. 조세 피난처 회사들의 한결같이 복잡한 배치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사적인 부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조세피난처는 노동에 대한 기업 우두머리들의 권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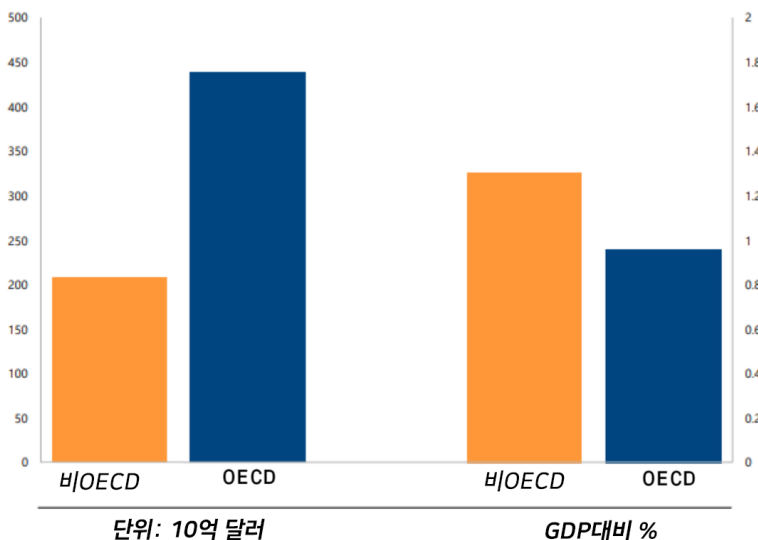
법인세 회피는 냉전 종식과 2007년 시작된 금융 위기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자유주의의 절정기에 만개했다. 많은 국가들이 조세 피난처 대응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고삐를 죄려는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특히 일부 정부들이 조세 회피에 대한 솜방망이식 접근이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조세 경쟁은 실제로 더욱 악화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 해외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개혁을 채택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것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IMF는 조세 회피로 인한 손실이

연간 6,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윤 이전으로 인한 추정 세입 손실(2013)



금융 위기 이후 대중들의 분노와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캠페인 활동은 각국 정부들에게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서서히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부들은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조치를 채택하면서도 세율을 감면하거나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양면 전략으로 사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법인세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에 대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수록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피해를 입는다.
2. 낮은 세율은 대부분의 기업 지분을 소유하는 부유층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갖는 권력을 증가시킨다. 이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3. 현 상태는 정부에 대한 기업 로비스트들의 과도한 권력과 노동 및 보다 광범위한 공익의 희생을 반영한다.
4. 조세피난처를 통해 이윤을 역외로 이전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역내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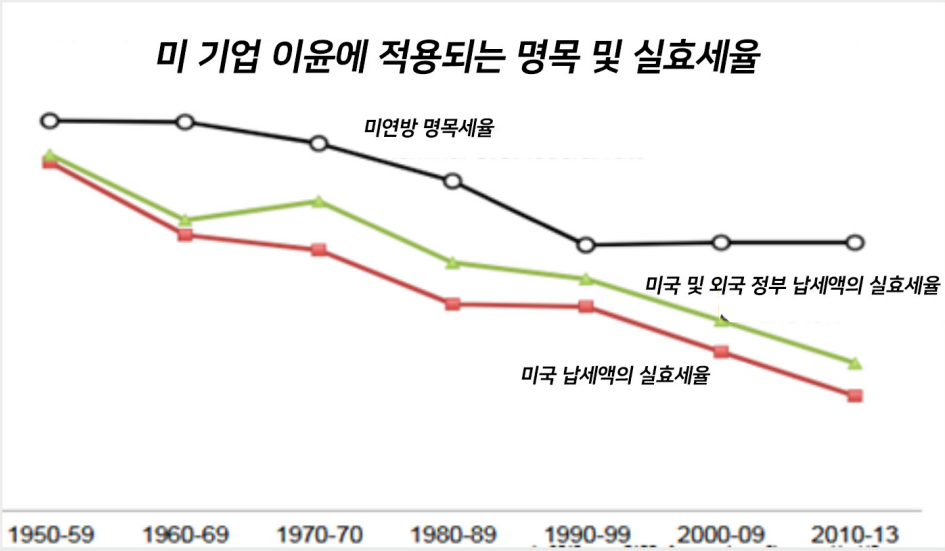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행했다. 2016년 종료된 세원잠식 및 이윤이전(BEPS) 사업은 몇몇 조세 당국이 적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노선을 취하도록 이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BEPS는 독립기업 원칙 자체에, 또한 기업 이윤에 대한 저과세 내지 비과세가 가용하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 문제의 근원에 다다르지 못했다.

대신 BEPS는 현 상태 위에 수백 쪽의 새로운 지침을 올려 놓았다.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거대 기술회사와 같은 디지털 다국적기업을 겨냥한 자체의 조세 개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세금으로 추가적인 세입을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제 과세의 쓸데없는 복잡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정부들이 대대적인 국제과세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데 자극을 줬다.

2019년 OECD는 마침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정하는 (일부에 의해 "BEPS 2.0"으로 명명된) 새로운 협상을 주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처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OECD의 선도적 역할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OECD가 전세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클럽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과 자국 회사들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칙 변경을 모색한다. 또한 해결책이 OECD에서 가장 강력한 회원국들 사이의 약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타협에 그칠 위험성도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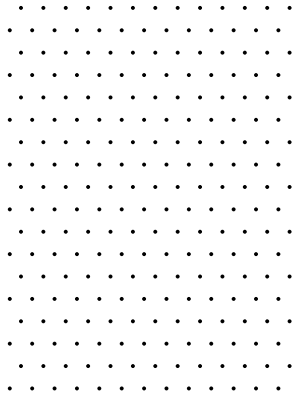
미국 기업의 납부세율은 1990년대 이후 3분의 1이 하락했다



출처: Gabriel Zucman,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2015

무엇을 할 것인가

1. 다국적기업은 마치 서로 독립해 있는 것처럼 각기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별개 회사들의 집합이 아니라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현안 보고서 2: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 세계 기업 과세 참조)
2. 정부는 유해한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소멸시키고 세율의 대폭 인하를 중단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에게 사회에 공정한 기여를 하기에 충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현안 보고서 3: 조세 경쟁의 억제)
3. 조세 당국은 법인세 회피를 억제하고 최고 부자들의 역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자원과 정치적 뒷받침, 정보를 필요로 한다. (현안 보고서 4: 조세 당국의 강화, 현안 보고서 7: 자동 정보 교환 참조)
4. 정부는 다국적기업들과 최고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현안 보고서 5: 조세피난처 이용 억제 참조)
5. 국제 과세는 법인세 회피 및 부패 등 조세피난처와 연루된 여타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공개 조사에 보다 개방적이어야 한다. (현안 보고서 6: 기업의 국가별 공개 보고서, 현안 보고서 8: 회사 실소유자 공개 참조)



이러한 요구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다른 모든 개혁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세 당국에 의존한다. 국가별 공개 보고는 언론인과 노동자, 그리고 여타 시민들이 언제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업의 조세 문제에 대한 개선된 공개 보고 없이 다른 개혁 조치들의 작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혁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 기업 과세나 조세 경쟁 억제 등의 일부 조치들은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OECD보다 민주적이며 모든 국가들을 포용하는 세계 기구에 의해 관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 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논리적 장소는 유엔이 될 것이다. 여타의 해법들은 개별 정부나 정부들의 모임에 의해 단독적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다자간 해법이 조만간 합의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디지털 소득세 도입이 OECD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논쟁의 길을 열었듯이 몇몇 정부들이 단독적 개혁을 채택한다면 이는 다른 정부들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동의하는 데도 자극을 줄 수 있다.

수년 간 이어져 온 부정합 기업 이윤 과세의 시기를 지나 이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해 모든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의 이윤에 대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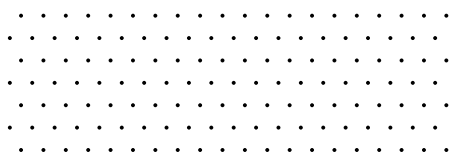
세계 조세 문제는 왜 세계 거버넌스를 요구하는가

본 현안 보고서들을 통해 파악된 문제 중 일부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은 세계적인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세계 조세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국제 과세 분야의 지배적인 규칙 제정 기구는 현재 36개국으로 이루어진 클럽인 OECD이다. OECD는 매우 영향력이 크며 때로는 각국의 국내 법에도 통합되는 조세 규칙을 협상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안았다.

OECD가 주로 서구의 부자 나라 정부에 의해 주도되며 개발도상국의 관심사보다 이들 국가의 관심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온 역사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은 매우 논쟁적이다. 예컨대 오랫동안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근거지가 있는 “거주” 국가와 그들이 투자하는 원천 국가 사이의 불균형한 과세권을 해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을 장려하는 경향을 낳았다.

OECD는 UN과 같이 국제법 상의 근거를 갖는 진정한 세계 조직이 아닌 세계 최대의 경제를 포함하지만 근 200개의 여타 국가들을 배제하는 20개의 국가 모임으로부터 이러한 역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Centre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

CICTAR: 세계 조세 연구를 이끌다

기업들은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된 로비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것을 투자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노조와 NGO, 공익 단체들이 연합해 국제법인세책임조사센터를 결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CICTAR는 세계 자료 센터로서 법인세 정책과 행동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를 통해 노조와 캠페인 조직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조세 관행을 이해할 수 있다. CICTAR의 연구는 주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임금인상 요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조세 문제와 관련된 효과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CICTAR의 작업은 이미 수억 달러의 탈루 세금을 폭로하는 데 일조했으며 수십 건의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또한 그것은 외부 위탁에 관한 호주 연방상원 청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700일간 지속된 단체교섭 협상을 종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의 기업 캠페인이 조세의 관점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세 캠페인에 사용할 기업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jason.ward@cictar.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OECD는 비OECD 국가 정부들이 조세 개혁안을 제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포용적 포럼을 창설했다. 포럼의 창설이 매우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OECD 국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0년 결론이 예정되어 있는 OECD의 "BEPS 2.0" 개혁 사업은 너무 빠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어 빈소국의 이해관심사가 강대국들간 밀실 거래의 뒷자리로 밀려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제 조세 규범을 정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약은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포용하는 세계 기구에 의해 협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구의 논리적 장소는 UN이 될 것이다. 현재 UN은 OECD 회원국들로부터 소외되어온 소규모 기술 위원회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OECD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조세 협약 및 기구가 창설되더라도 국제 과세의 모든 문제들이 마법같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관건이 되는 국가 이익이 상이하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OECD보다 높은 정당성을 보유할 것이며 약소국들에게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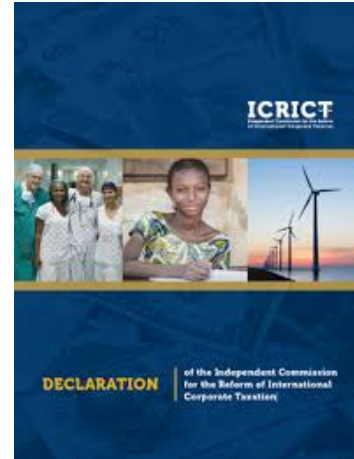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국제 기업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ICRICT)

조세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너무나 자주 중요한 논쟁에서 배제되며 이는 대기업과 대형 회계 회사, 조세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규칙을 작성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인세 회피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에 대응하여 ICRICT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 교수, 정치인들을 결집시켜 신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익에 따라 세계 조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전직 UN 사무차장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Jos Antonio Ocampo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커미셔너에는 토마 피케티, 자야티 고쉬 Jayati Ghosh,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가 포함되어 있다.

PSI는 ICRICT의 창립 회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멈춘 조세 규칙을 수리하는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crict.com를 참조하라.



국제 노동조합 권리 센터(ICTUR) - 저널

세금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가? 2018년 PSI는 ICTUR 저널의 "노동자를 위한 조세 정의" 특집을 객원 편집하였다.

해당 호는 세금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개괄하고 전세계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임금 정의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세정의를 위한 싸움과 연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강력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기사는 psishort.link/ictu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조세정의연맹(GATJ)

GATJ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국제적 운동으로 이들은 국가적 세계적 조세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감독, 부의 재분배를 위한 캠페인 활동 속에서 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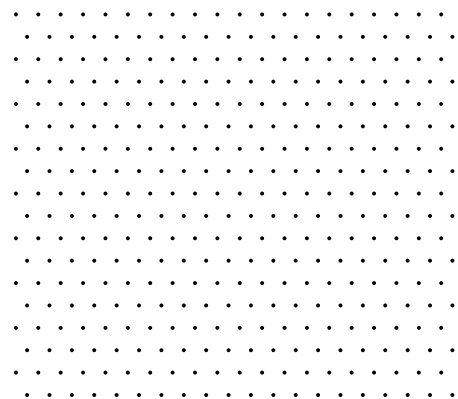
웹사이트: www.globaltaxjustice.org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세정의네트워크(TNJ)는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비롯해 국제 조세와 금융 규제 분야의 연구, 분석, 권익보호 활동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국제 네트워크이다. 웹사이트는 조세정의를 위한 싸움과 관련된 최신 연구 및 정기 뉴스를 제공하며 시민사회가 활용하기에 알맞도록 제작되었다.

웹사이트: www.taxjustice.net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2

KOREAN

현안 보고서 2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하는 합산 과세를 요구한다

합산 과세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 세계 기업 과세

핵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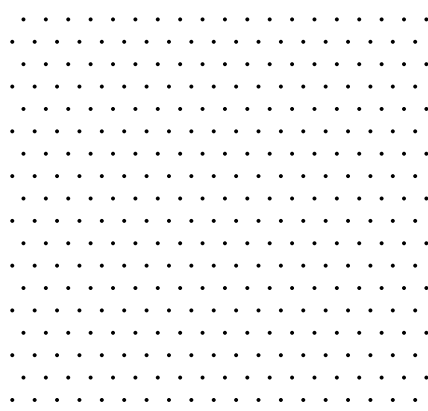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전체 이윤을 기초로 한 다국적기업 과세에 착수한다
2. 여타 정부와 협력하여 공식분배법에 따른 합산 과세를 지역적 세계적 기준으로 만든다

기업 과세가 지닌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다국적기업이 단일 세계 기업이 아니라 마치 별개 회사인 것처럼 상호 교역하는 자회사들의 집합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진정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세금의 취지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취급된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국적기업들이 현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수도 적었던 근 백년 전의 기이한 국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결 과제: 분절화된 조세 제도를 이용하는 다국적기업

세계 교역의 3분의 1 이상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 과세의 토대가 되는 “독립기업 원칙”은 이러한 교역의 가격 책정이 공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 회사 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독립기업 원칙은 어불성설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자회사에 대해 고도의 통제력을 행사하며 이들 자회사가 공개 시장에 존재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많은 거래들은 소프트웨어나 브랜드 등의 무형 자산을 수반하며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조세피난처가 이윤의 종착지가 되도록 자신들의 내부 거래를 조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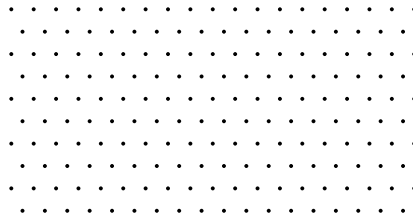
다국적기업들은 자본 또는 지적 재산을 역외의 조세피난처나 점차 엄청나게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에 둬으로써 거대한 양의 이윤을 역외로 이전해왔다. 그런 다음 조세피난처의 회사들은 이러한 자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동료 자회사들에게 부과한다. 조세피난처가 돈의 종착지가 되는 동안 후자는 이러한 요금을 자신들의 이윤에서 공제함으로써 세금 고지 금액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행들은 너무나 만연해서 조세피난처는 많은 기업들의 구조 전체에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많은 급여를 받는 세무 전문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한 독립기업 원칙의 활용법에 대해 기업들에게 조언하는 동안 이 원칙의 허구성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수천 쪽의 규칙과 지침이 쓰여졌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최소의 세금만을 납부하는 디지털 거대기업의 지배력이 증가하면서 독립기업 원칙이 파산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

2013년과 2016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개혁 협상으로 인해 실제 사업이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기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조세 회피의 전문 용어인 세원잠식 및 이윤이전(BEPS)으로 알려져 있다. BEPS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미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혁으로 조세 회피의 거대한 문제 전체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시사할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OECD 회원국들과 여타 국가들은 현재 BEPS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회사의 과세 문제를 대상으로 또 다른 개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회사가 어떠한 실물도 보유하지 않는 온라인 업계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논쟁 속에서 서서히 확산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OECD 절차와는 별개의 진행과정을 통해 자체의 특별 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공식분배법

해법은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대해 그들의 본모습인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합산 과세로 명명되며 현행 제도를 대체하기 보다는 그것에 추가되는 매우 제한된 형식이긴 하지만 OECD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것의 실질적 작용이 가능한 방식은 “공식분배법”을 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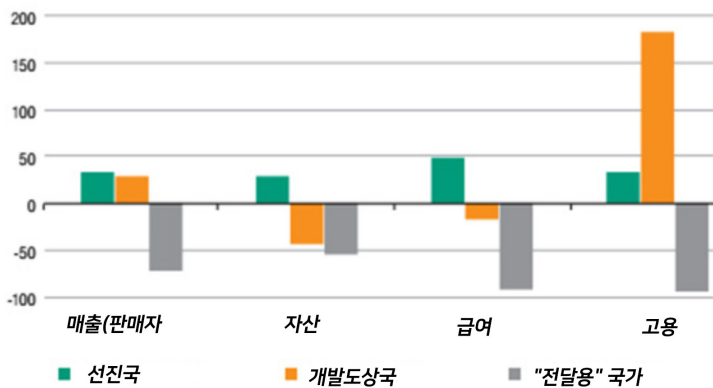
이는 회사의 판매 실적이 있는 지역, 고용인의 소재지, 회사가 사용한 실물 자산과 자원을 고려하는 공식에 기초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윤이 과세의 취지에서 사업이 수행된 여러 국가별로 분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각 국가별로 할당받은 다국적기업의 이윤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합산 과세가 갖는 이점은 이윤의 방향을 조세피난처로 돌리기 위해 빈번하게 조작되는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윤이 어느 곳에 있던 다국적기업의 이윤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식분배법의 중요성은 자본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자산과 달리 회사의 고용인과 고객, 실물 자산은 조세 규칙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선택은 여러 국가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출을 위한 재화가 생산되지만 큰 소비 시장은 아닌 개발도상국에게는 노동비용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공식이 매출에 기초하는 공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제도 변경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발언권을 갖는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BEPS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 현재의 협상에 개발도상국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OECD가 주장하는 진정한 포용성은 개발도상국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로 고려되는지에 달려 있다.

공식분배법에 따른 합산 과세가 투자를 둘러싼 국가들 상호간의 경쟁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자국에 할당되는 이윤 부분에 낮은 세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이나 실물 자산을 해당 국가로 옮기도록 다국적기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세금 우대책이 단지 서류상의 이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자리와 투자의 이전에 기초함을 의미하지만 국가들이 서로의 세입을 잠식하는 현행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또한 기업 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최저 실효세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SI와 EPSU, 그리고 유럽노조연맹은 이러한 실효세율이 25%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게 공식분배법은 “전달용” 조세피난처에
기장되는 이윤은 줄어들고 여타 국가에 기장되는**



출처: IMF



합산 과세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다국적기업에 대해 별개 기업들의 집합이 아니라 단일한 세계 기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내부 거래를 이용해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킴으로써 국고 세입과 공공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다.
2.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업 경영자가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다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
3. 합산 과세에 기초한 세계 조세 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많은 세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4. 합산 과세는 기업 이윤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현행 제도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합산 과세는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상이한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합의를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소위 공통연결법인세원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CCCTB) 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계획의 목적은 유럽 전역에 걸친 단일한 세원을 창출하고 해당 세원에 대해 합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CCCTB 계획은 이웃들보다 낮은 세금을 제공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EU 내의 저세금 국가들의 저항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기업 이윤 창출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공식에 기초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해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해야 한다.
2. 공식에 사용되는 요인들에 기초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세율로 합산 과세를 보강해야 한다.

합산 과세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이윤과 납세 현황, 기타 핵심 재무 데이터를 사업 운영 국가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공개 보고서를 통해 합산 과세의 접근법을 적용하기는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정부는 또한 현행 OECD 접근법의 일부이긴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전체 이윤을 고려함으로써 합산 과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이전 가격 평가 방법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윤분할법 profit-split method과 공유순이익법 shared net margin method이 그것이다. 대안적 최저 법인세에 공식분배법을 활용하는 것은 또다른 접근법이 될 것이다(세부주제 요약 참조).

국제 협력의 필요성 및 근본적 개혁 추진에 대한 OECD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할 때 각국 정부들은 조세 회피와 조세 경쟁에 대응하는 세계 조세협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협약에 대한 감독은 이러한 업무를 맡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모든 국가들

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 기관인 UN의 세계 조세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세계 기구가 필요한 것은 OECD 외부에 있는 중하위소득 국가들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

기업 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PSI

가 지지하는 최저 세계

실효세율

세부주제 요약

정부는 공식분배법의 채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유럽 의회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 공통연결법인세원(CCCTB)에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는 디지털 사업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국경을 가로질러 교역하는 모든 회사를 포괄할 때까지 CCCTB 적용 최저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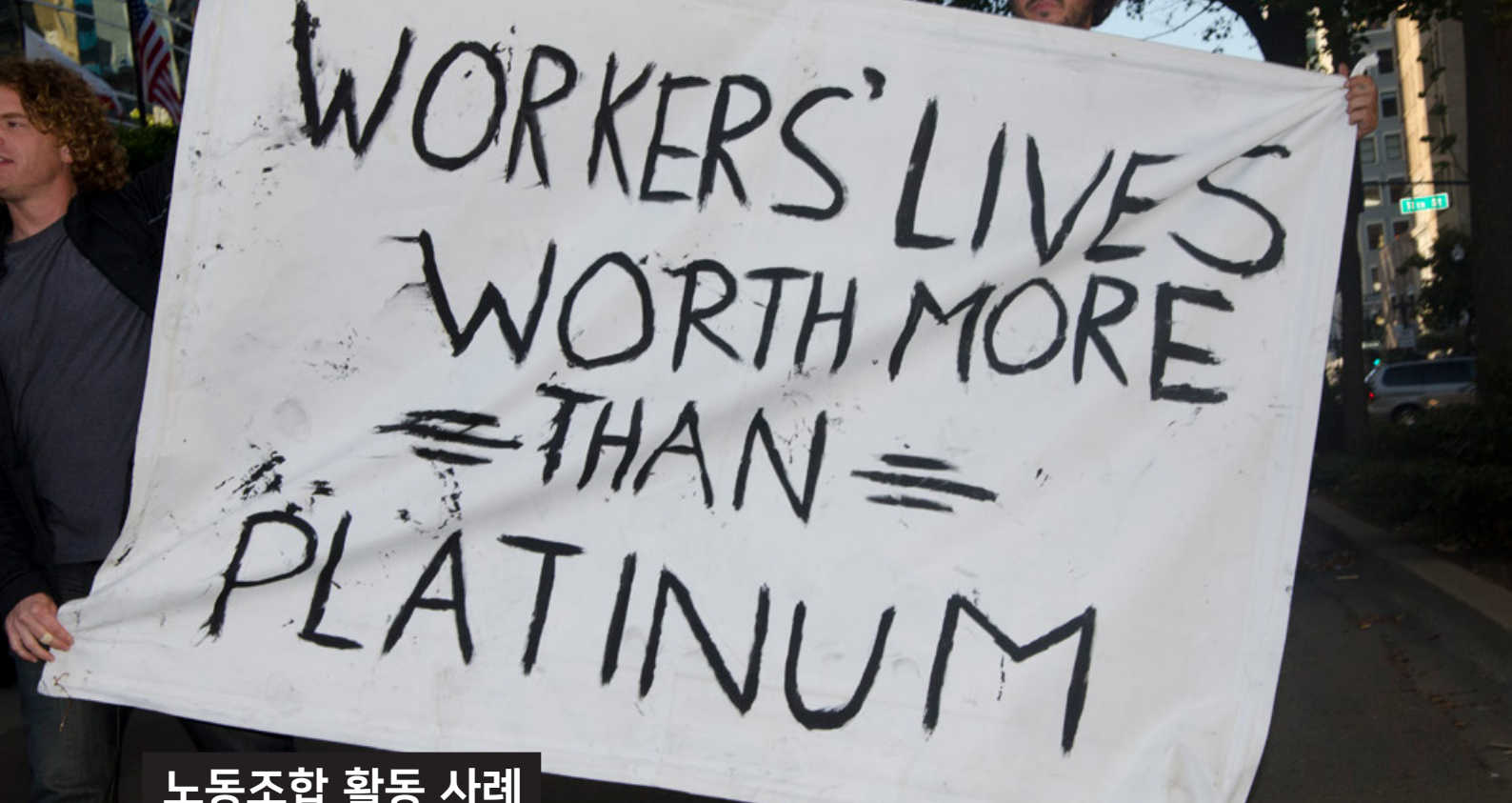
아프리카 연합 등의 여타 지역 기구들은 매출, 고용인수, 사용되는 실물 자산과 자원을 바탕으로 EU가 개발한 것에 부합하며 공식분배법에 따른 지역적 CCCTB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이 36개국에 불과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동등하게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식분배법에 따른 합산 과세는 장기적으로 세계 협약의 형태로 구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및 개별 국가들은 또한 합산 과세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될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관할지역 내의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 공개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이윤이 가장되는 지역 및 이윤에 기여하는 유형의 요인들이 소재하는 지역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이전 가격 산정과 관련해 이윤분할법과 공유순이익법을 보다 많이 활용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OECD에 의해 승인된 것이지만 다국적기업의 전체 이윤에 준거하여 지역별 과세 소득을 계산한다.
3. 공식에 기초한 기업의 전체 이윤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는 몫으로 계산되는 대안적 최저 법인세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 법인세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공식분배법에 따른 합산 과세를 세계 규범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 조세협약이 창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은 또한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 법인세율을 확립하고 충분한 자원을 갖춘 UN 산하의 세계 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UN의 세계 조세 기구는 조세 경쟁을 억제하고 조세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빈국의 관심사가 부국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WORKERS' LIVES
WORTH MORE
= THAN =
PLATINUM

노동조합 활동 사례

남아공: 탈세는 임금을 떨어뜨린다 — 그리고 노동자들을 죽인다

남아공의 마리카나 백금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사용자 론민으로부터 그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30명 이상의 광부들이 2012년의 파업 중에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마리카나 조사위원회(MCI)는 남아공에 있는 론민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조사관들에게 부여했다. 하나의 질문은 (협상을 거부한) 회사가 사실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기밀로 유지되었던 이들 재무제표를 통해 론민의 남아공 자회사가 평균 1,600만\$의 돈을 매년 버뮤다의 한 페이퍼 컴퍼니에 “판매 수수료”로 송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버뮤다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돈을 받은 회사는 패러다이스 페이퍼스의 핵심에 있었던 로펌인 애플비 서비스사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버뮤다로 보내진 돈을 파업 노동자들의 숫자였던 4,000원으로 나눠보면 이것만으로도 거의 100%의 임금 인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장부를 통해 연간 1,000만\$ 이상의 돈이 “관리 수수료”로 쓰여진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40명의 관리자들에게 막대한 급여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50만\$에 달하는 주식 기준 상여금을 수령했다.

이윤 이전은 임금 지급을 정부 세입에 의존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핵심적인 쟁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회사의 실제 이윤을 가리고 임금 협상의 명분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파업 광부들과 같은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막중한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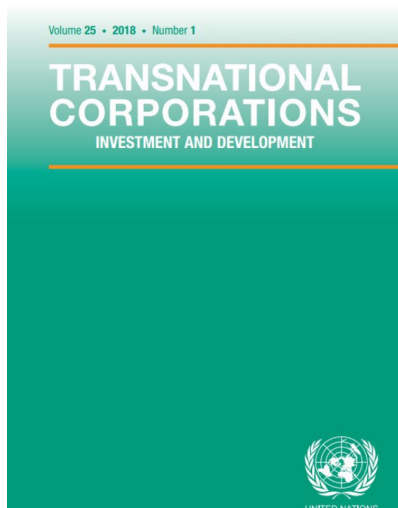
론민의 파업 노동자들이 들은 말은 그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었다. 론민이 소유한 모든 회사의 장부가 공개되었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노조는 전진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게 크다.

더 알아보기

국제 기업 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 (ICRICT)

다국적기업 과세 규칙 개선을 위한 로드맵

www.icrict.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역과 개발에 관한 UN 컨퍼런스 — 보고서

법인세원의 공유: 다국적기업 공정 과세 및 공식분배법의 선택

토마조 파치오 Tommaso Faccio, 벨피 피츠제랄드 Valpy Fitzgerald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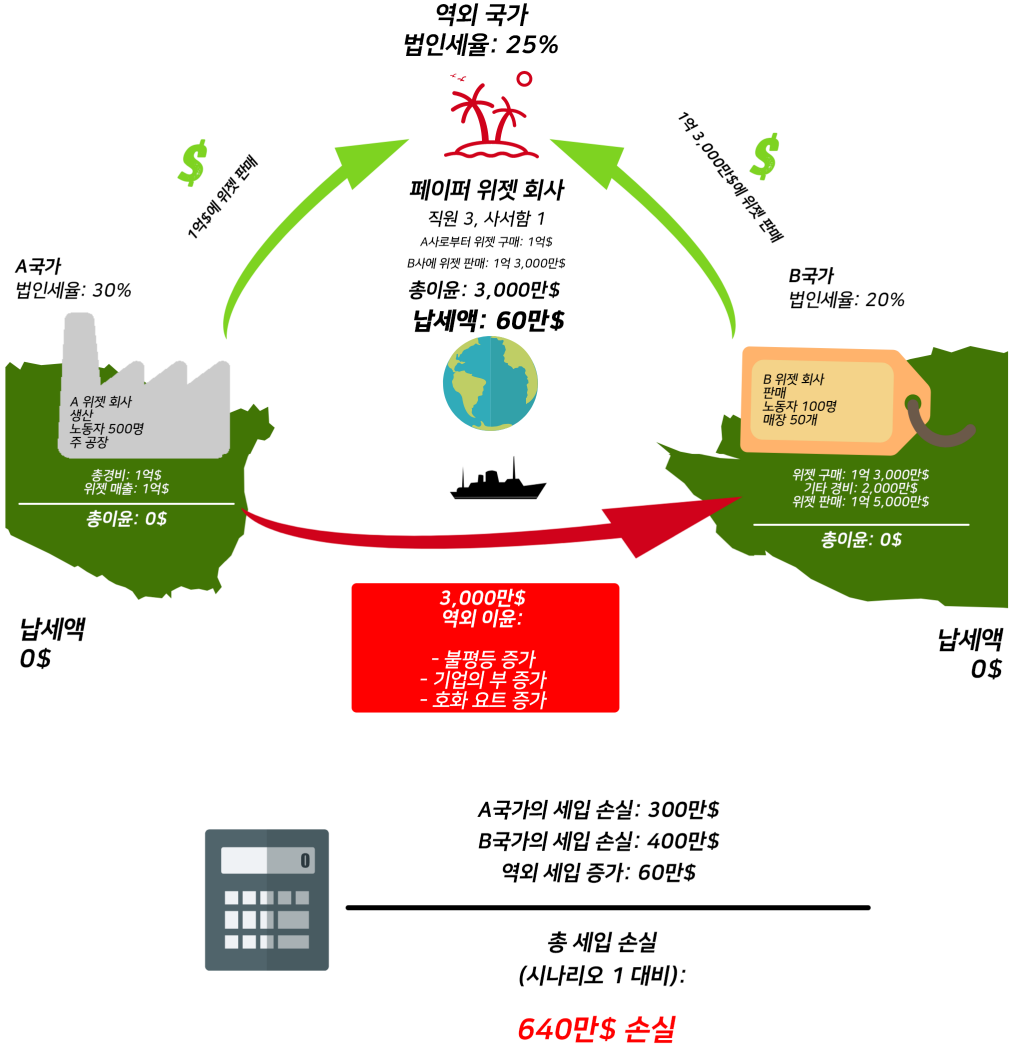
<https://unctad.org/en/Publication-Chapters/diae2018d4a5.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록 — 도해TAXAT







다음에 제시되는 도해는 현행 세계 조세 체제와 비교해 새로운 세계 조세 규칙이 어떻게 생산국가와 소비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간단히 개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는 조세피난처로 이윤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전가격 조작(관계사들 간의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 지불되는 가격의 조작)을 사용한다 현대 경제에서 사용 가능성이 더 높은 방법은 지적 재산이나 부채 금융, 또는 위험과 같은 무형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배치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런 다음 회사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한다.

기업은 현행 조세 규칙을 어떻게 속이는가
 위젯 기업은 A국가에서 위젯을 만들어 B국가에 판매한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그들은 역외 피난처에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개설하고 이 자회사를 중개자로 만듦으로써 A국가와 B국가의 세입을 막대하게 감소시킨다.



어떻게 합산 과세는 "위젯 기업"의 총이윤을 3,000만\$로 할당하는가
 합산 과세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과세권을 할당한다. 이것은 공식에 기초한
 핵심 사업 요인 및 생산 요인을 요구한다.

	 생산 A국가	 판매 B국가	 실제 활동 없음 역외
고용인 	500 (83%)	100 (16%)	3 (0.5%)
고정 자산 	\$100m (50%)	\$100m (50%)	\$0 (0%)
판매 	\$0 (0%)	\$150m (100%)	\$0 (0%)
<hr/>			
이윤 할당 (생산 요인의 단순 비율)	44.3%	55.3%	0.2%
3,000만\$의 이윤 할당	\$13.29m	\$16.59m	\$0.6m
국가 세율	30%	20%	2%
국가별 징수세액	\$4m	\$3.3m	\$0.0012m



위젯 회사의 총 납세액
730만\$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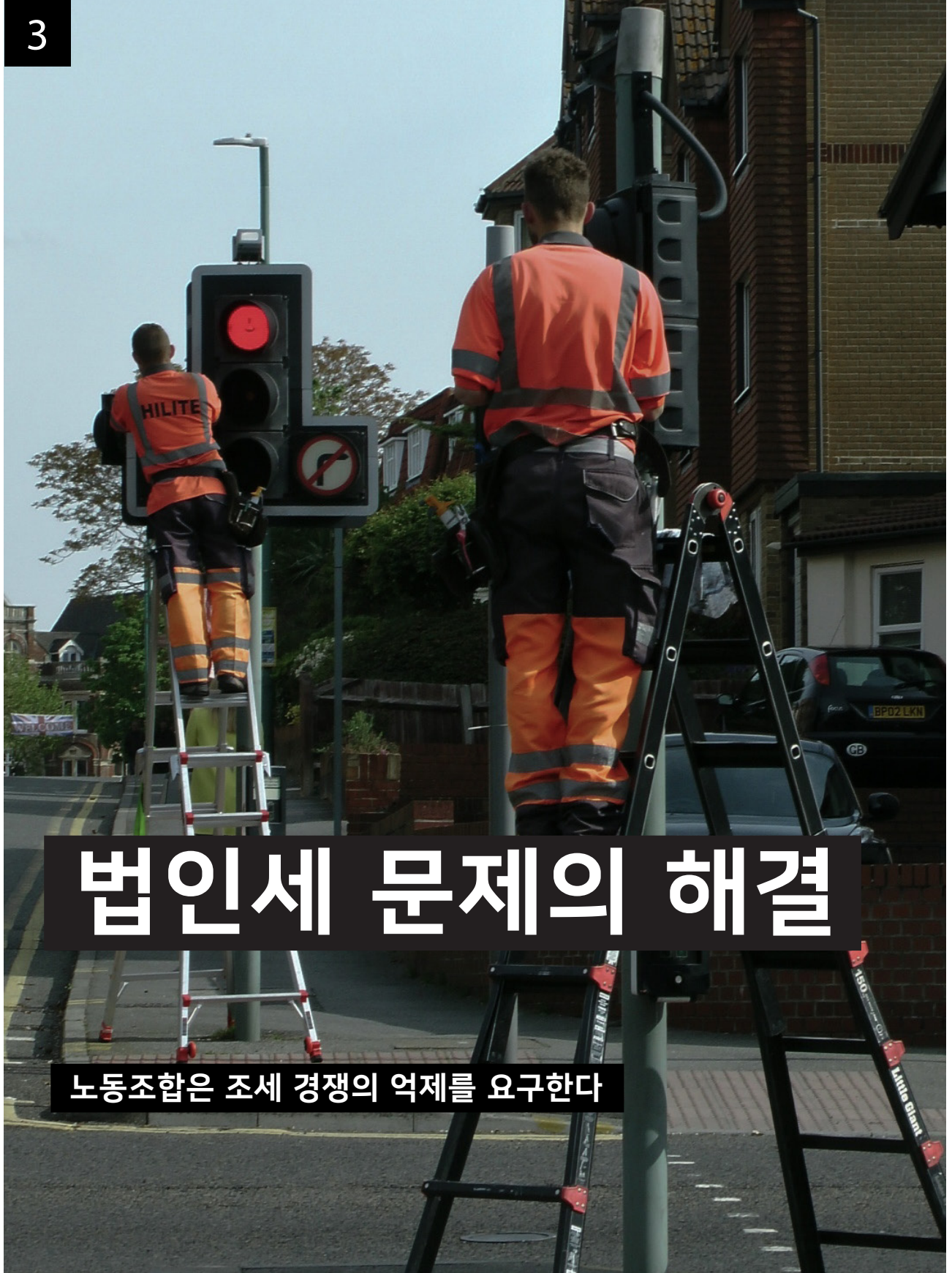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3

KOREAN

현안 보고서 3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조세 경쟁의 억제를 요구한다

조세 경쟁의 억제

해결 과제: 기업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값비싼 지원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법인세율을 추가 감면하지 않는다
2.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억제한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학교와 병원 등
의 공공 서비스에 쓰일 수 있었을
국고 세입의 포기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
르면서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세제 혜
택을 제공한다. 너무나 빈번하게도 이
러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값비싼 보조금에 불
과할 뿐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 이윤에 적용되는
세율은 전세계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투자를 촉진
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기업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믿음을 활발
하게 선전했다. 하지만 한 국가가 세율
을 낮출 때 흔히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
라간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율을 둘러
싼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들의 임
금 하락과 노동조건 악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과 다르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세율이 하락한 것과 동시
에 기업의 이윤은 증가했다. 컨설팅 회
사인 맥킨지사는 2015년 기업들의 순
이윤이 1980년 이후 5배 늘어났다고
추산한 바 있다

**“법인세를 둘러싼 바닥으로의 경주를 지속함으로써
정부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책임에서 달아나 다음 세계
위기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웨인 스완 Wayne S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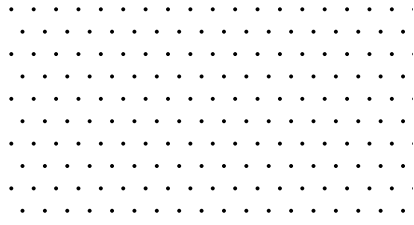
ICRICT 커미셔너,

전직 호주 재무부 장관

정부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기업의 세금 고지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법인 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세율을 인하한다. 1980년대 이후 세율은 40~50%에서 30% 미만으로 급격하게 하락해왔다. 최근 몇 년간 경제의 일부로서 기업의 이윤은 성장했지만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 단행된 이러한 종류의 결정 중 가장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이었다. 이 조치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국가 부채 및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는 희망 속에서 특정 경제 부문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좋아하는데 이는 이러한 혜택이 노동자의 역량을 육성하거나 공공 인프라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손쉬운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들이 느끼는 또다른 매력은 보조금과 달리 세제 혜택은 공적 자금을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금을 덜 걷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상 세제 혜택은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가장 교활하고 값비싼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 세제 혜택의 경제적 손해가 공적 자금의 포기라는 비용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미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거나 세제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나라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번역 추가할 것!)



세제 혜택은 종종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패와 기업 로비스트에 의한 정치의 포섭에 취약하다. 세제 혜택이 종종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역의 중소기업들보다 외국의 대형 회사들이 보다 유리한 조세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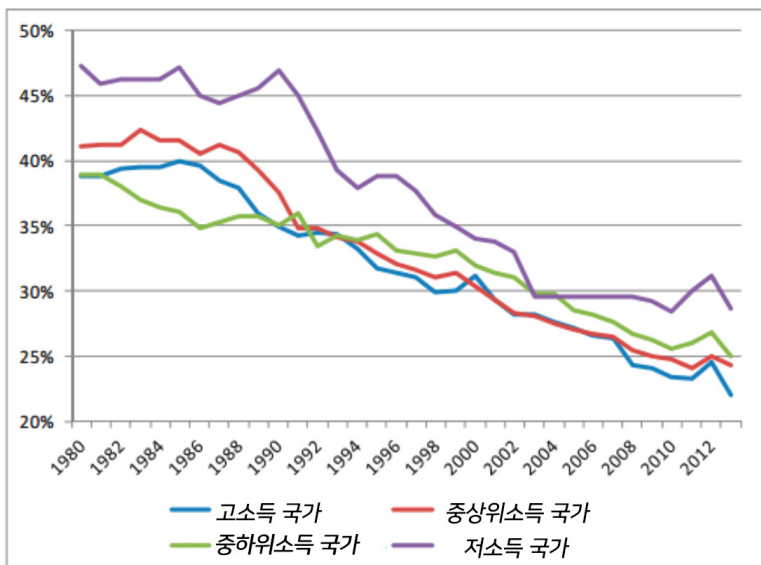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가나 지역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능숙하게 값비싼 세제 혜택을 얻어낸다. 아마존사는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아마존의 새 본사 유치를 놓고 경쟁하도록 만들어 2018년 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미 아마존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유인책에는 15년간의 세금 면제, 재산세 100% 감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직접 실어나를 수송관을 설치하는 “아마존 대학”의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많은 도시들은 입찰 사실을 비밀에 부쳤으며 세금을 비롯해 제시된 우대책에 대한 정보는 삭제되었다.

결국 아마존사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세제 혜택을 약속받은 후에 뉴욕시와 워싱턴 DC의 한 근교를 낙점했다. 이 곳은 명백한 국가 중심지로 아마존사는 이러한 경쟁이 없었더라도 어떻게든 이 곳으로 본사를 옮겼을 것이다.

법인세율은 198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하락했다

그림 2. 기업 소득세율, 1980~2013



출처: IMF

아마존사가 지역사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 뉴욕의 지역 활동가들이 펼친 전례없는 캠페인 이후 회사는 도시에서 철수했다.

유럽 국가들 또한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조세 판정이 포함되며 아일랜드가 내린 판정은 악명높은 것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애플사는 세율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로 자신의 이윤을 이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특허 박스” 세제 혜택이 유럽 전역에 걸쳐 유행한 바 있다. 이미 자체의 세제 혜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이러한 유형의 세제 혜택으로 혁신과 연구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많은 소유 기술 또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투자자에게 최장 10년의 면세 기간을 제공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면세 기간이 끝날 때 일부 투자자들은 그냥 철수해 버리며 일부는 장기 연장을 얻기 위해 철수를 위협한다. 또다른 다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새로운 국가로 (공장이나 호텔 등의) 자산을 이전하기도 한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맥도날드: 언해피 노동자, 언해피 세금 음모

맥도날드는 노동자들을 혹사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최근 노조는 맥도날드의 의심스러운 조세 관행을 밝히는 데도 일조했다. 이것은 세계 노조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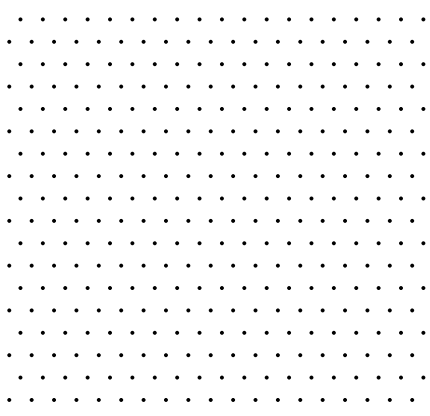
2009년 맥도날드(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부문 사용자)는 "지적 재산"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룩셈부르크에 설립하고 회사 계좌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보내기 시작했다. 맥도날드의 자회사가 설립된 룩셈부르크의 실효세율은 2009년과 2015년 사이 1.7%에 불과했다.

한편 2012년 미국의 노조운동은 <15달러를 위한 싸움>을 개시했다. 이것은 맥도날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합당한 급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이었다. 일년 사이에 전국 100개의 도시에서 파업이 진행되었다. 나쁜 관행은 단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세계적 사용자로서 맥도날드는 브라질에서는 노동법과 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시아에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에서는 0시간 계약제 사용을 "선도한" 것으로 고발되었다.

<15달러를 위한 싸움>의 핵심 노조였던 국제서비스노동조합 SEIU는 패스트푸드 거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미국의 노동자 쟁점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거의 동시에 연구자들은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대규모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SEIU는 PSI 및 EPSU와의 연계를 활용해 브뤼셀에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들 노조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연구](#)는 두 번에 걸친 조세 판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및 룩셈부르크에서의 맥도날드 조세 관행에 대한 DG COMP(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 조사 기관)의 공식 조사 착수로 이어졌다.

<15달러를 위한 싸움>은 주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 임금 15달러를 공약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입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SI/EPSU의 보고서 [<언해피밀>Unhappy Meal](#)과 [<황금을 낚는 속임수>Golden Dodges](#)를 참조하라.



조세조약

또다른 문제 영역은 쌍방 조세조약이다. 이들 조약 중 3,000개 이상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과세할 권리를 사업장 소재 국가와 사업 수행 국가(“원천” 국가)에 분할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은 종종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귀중한 과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조약은 또한 기업의 이윤을 보다 수월하게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 혜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거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신생 산업 투자의 물꼬를 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엄정하게 통제됨으로써 공적 자금이 투자자와 기업 임원을 위한 거대한 보조금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한 어떠한 우대책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약속한 경제 사회적 혜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세제 혜택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모든 유자격 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정부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에 제공되는 혜택이다. 재량에 의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기업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정당 재정을 후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정치를 포섭할 유인을 낳는다. 재량에 의한 세제 혜택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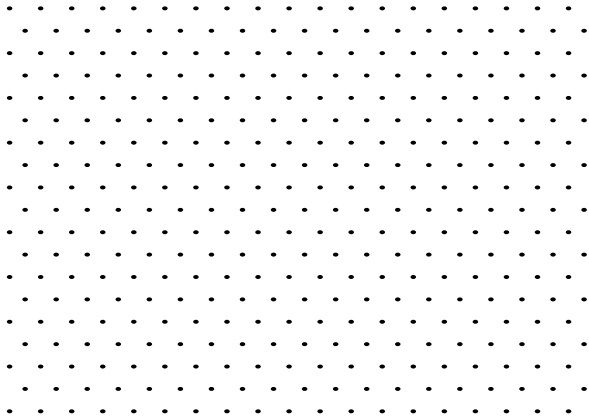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쌍방 조세조약 중 많은 경우는 공정한 몫의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이용된다.



지금까지의 경과

법인세율 인하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국제적 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빼냄으로써 타 정부의 세입에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질 때조차 그것은 해당 정부의 주권 문제로 취급된다. “유해한 세금 관행”을 억제하려는 OECD와 유럽연합의 노력은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는 조세피난처로의 이윤 이전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특정한 유형의 세제 혜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저 그것을 철회한 다음 새로운 유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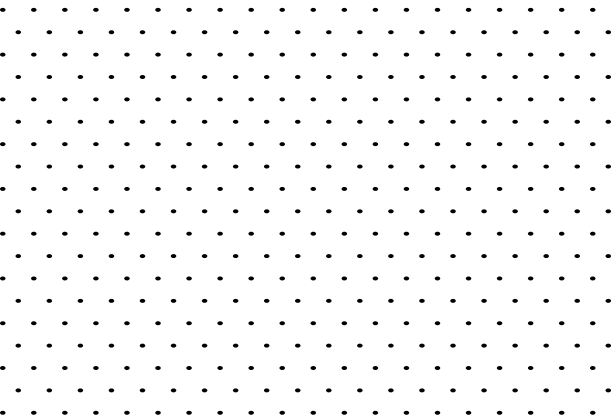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2019년 중반 OECD에서 만난 정부들은 전세계에 적용되는 최저 실효세율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이것이 모든 국가의 법인세율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국가나 (조세피난처 등의) 관할지역에서 이 수준에 미달하여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국가가 해당 기업의 납부 세액을 “추가로 채울”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커다란 진전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OECD는 비과세를 그 자체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 최저 세율이 너무 협소한 기업 활동 기반에 적용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최저 세율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계의 세율이 실제로 이러한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율이 적어도 많은 국가의 현 세율에 가까운 25%가 되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율에 대한 조치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면세 기간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허 박스” 세제 혜택 등 이윤에 대한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그러한 지원이 별 필요 없는 부유한 기업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이다. 그러한 세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보존된 세입은 사회에 혜택을 주며 공공 보건의로, 학교, 인프라, 연구 및 개발 등의 투자 환경 역시 개선하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보다 잘 활용될 것이다. 다른 유형의 세제 혜택은 제한되는 동시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종종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경우 투자가 이웃 국가로 이동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들은 세금 우대책을 표준화하고 조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국제 조세 규칙에 대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세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세금 감면과 세제 혜택은 학교와 병원 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쓰일 국고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세 경쟁으로 인한 보상은 주로 남성들로 구성되는 부유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공공 서비스 이용자들은 손해를 입는다.
3. 세제 혜택은 쉽게 로비와 부패로 이어지며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기업의 투자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4. 국가들 사이의 조세 경쟁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쟁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나머지를 희생시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5. 낙후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남용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다.



**“나는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잠재적 수익에 부과될
세율 때문에 분별 있는 투자를 피하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

워렌 버핏, 억만장자 투자자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동조합은 기업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여타 국가들과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세율에 합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투자한 국가에서 25% 이상의 세율로 이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본국은 해당 이윤에 대해 다시 과세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로 의미한다.
2. 재량에 의한 모든 세제 혜택, 즉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모든 유자격 회사에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정치인의 재량에 따라 특정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부패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3. 이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면세 기간, “특허 박스”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위장된 형태의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 판정,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윤이 낮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주 회사로 보내질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제도의 폐지가 포함된다.
4. 실투자비용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은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혜택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법자에 의해 신중하게 조사되고 공중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조세 지출(세금 우대 비용)은 예산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공중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보에 입각한 공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술되어야 하며 각 세제 혜택과 관련 조건의 세입 비용 추계를 포함하여 회사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쌍방 조세조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 기업 소득 유출에 과세할 국가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6. 세금 우대책을 제공하기 전 정부는 공적 비용편익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포기된 세입을 개괄하고 주장된 혜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칠레: 퇴행적 조세 개혁에 반대하는 연합의 구축

중남미 정부들은 다국적 회사들의 불법 활동 및 정부가 선물한 세금 혜택을 통해 상당한 재정 자원을 상실한다. 중남미의 퇴행적 조세 제도에는 재산, 기업, 배당금에 대한 OECD 평균 대비 낮은 세율이 포함된다.

2018년 칠레 대통령은 자유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의제 채택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조세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내부세무감사 자연합(AFICH)에 의해 칠레 조세 제도의 진보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지지되었던 최근의 개혁들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퇴행적 조세안에 반대하기 위해 칠레의 노동조합들은 정치가들을 교육하고 “**고양이를 토끼라 믿지 마라** Que no te pasen gato por liebre” 캠페인을 통해 대중적 압력을 구축했다. 주요 목표는 세금 논쟁을 대중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 문제 이상의 것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 캠페인은 단지 조세 행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 서비스와도 관련된다는 점이다.

칠레의 노조운동은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소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 조세 행정 잠식을 통해) 부자들과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 윤곽을 제시했다.

캠페인은 제안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짧은 해설 영상, 길거리 게시판, 라디오 신문 TV와의 인터뷰 등을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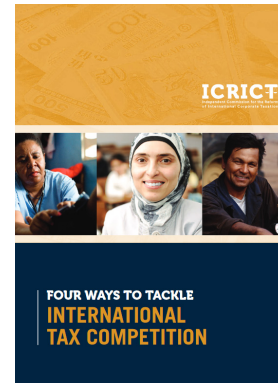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세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캠페인은 정부의 제안을 18개월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의회는 캠페인 지도부를 초청해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쳐 제안 문구의 중요한 수정을 강제했다.

더 알아보기

국제 기업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 (ICRICT) — 보고서

“국제 조세 경쟁 해결의 네 가지 방식”

<https://www.icrict.com/icrict-documents-four-ways-to-tack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고장중 STILL BROKEN - G20 조세 개혁 옥스팜 + PSI — 보고서

PSI, 옥스팜을 비롯한 선도적 조직들이 2015 G20 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로 기능을 멈춘 국제 조세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개괄하고 있다.

<http://www.psishort.link/stillbrok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4

KOREAN

현안 보고서 4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조세 당국의 강화를 요구한다

조세 당국의 강화

모든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세제 규칙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개선된 세제 규칙만으로는 규칙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규칙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 조세 당국을 위한 보다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많은 조세 행정기관들은 전면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과제: 권한이 적은 조세 당국은 더 적은 세금을 징수한다

핵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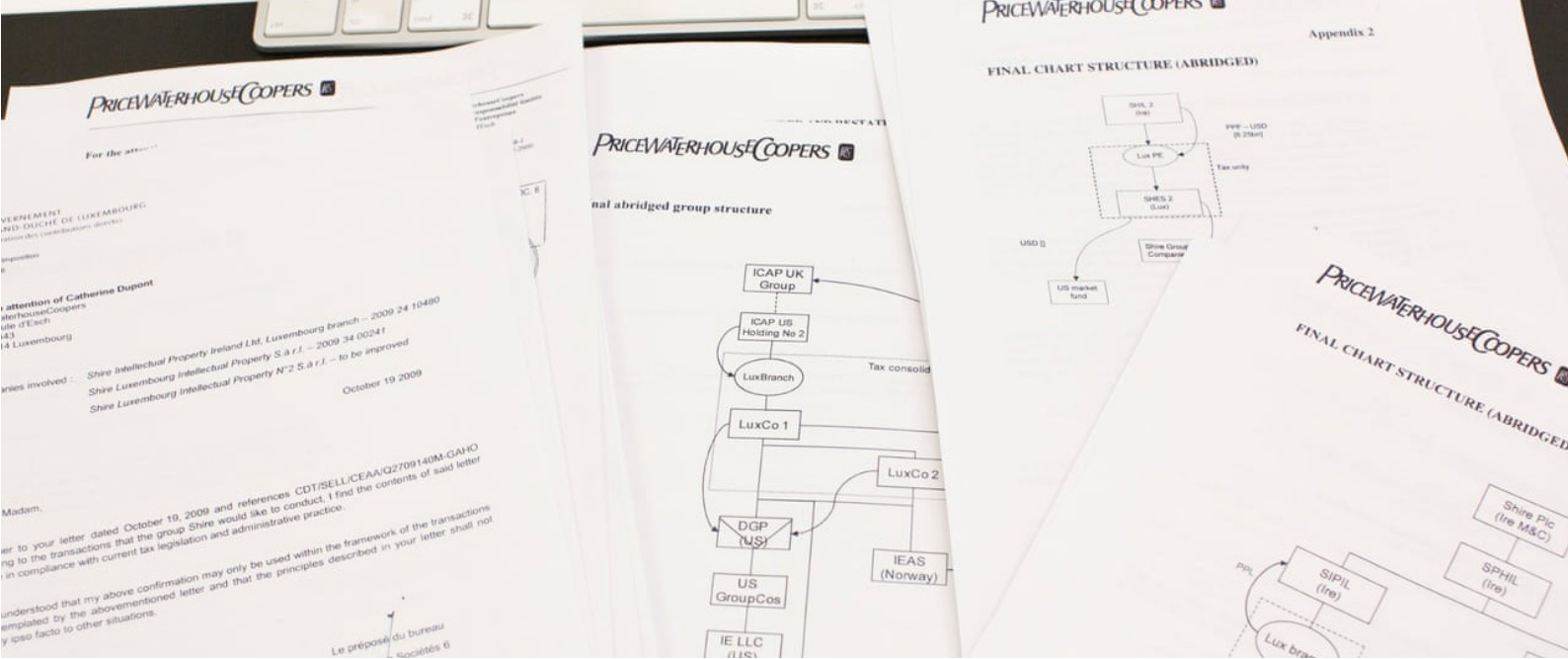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국가 조세 당국에게 추가적인 자원 및 정치적 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이 이용하는 장치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자회사들간의 거래 “이전 가격” — 이것은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기 위해 빈번하게 남용된다 — 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다국적기업은 통상 많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을 소집하여 소송 변호를 맡긴다. 조세 당국은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 장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통상 저소득 국가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세 당국은 전문성과 자원,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조세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권리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공개 발언을 가능케 하는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역시 필요하다.

자원의 결여는 또한 조세 당국이 모든 세입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며 직무 수행은 더 느리고 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의 준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지며 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장치의 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유럽공공서비스노조가 2013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EU 28개 회원국 중 24개의 나라에서 세무서 고용이 감축되었으며 상실된 일자리는 50,000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감축은 대기업 및 부유한 개인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줄어드는 반면 일반 시민들의 세금 납부는 점점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의 직원 예산은 2013년 이후 약 15%가 삭감되었다. 조세 당국 예산의 이러한 삭감은 기업 및 부유층 과세에 대한 이들 국가의 “숨방망이” 접근법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접근법에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조세 남용 방지 법률의 전면 시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 역시 포함되었다.

조세 당국이 부유한 기업과 최고 부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자원과 정치적 뒷받침을 갖지 못할 때 이것의 불가피한 결과는 이들 납세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데 성공한다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 지불할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대중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야 한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손해를 입는다.

조세 당국이 그들의 업부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와 지원이 있다면 그 결과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수년간 영국의 조세 당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축소되었다. 탈세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보다 강력하면서도 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접근법으로 이어졌다. 2018년과 19년 영국 시민들의 역외 소득으로부터 약 **5억 6천만£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이는 2년 전 징수액의 두 배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충분한 자원을 갖춘 조세 당국의 필요성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든 세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입이 국내총생산의 20%에 미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30%를 상회한다. 개발도상국은 조세 당국의 역량 부족을 이용하여 고도로 남용되는 이전가격 조작에 특히 취약하다. 불법 금융흐름에 대한 음베키Mbeki 고위급 패널의 추산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연간 최대 500억\$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 중 많은 부분은 조세 회피와 탈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세계 평균의 직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65만 명의 조세 공무원들이 충원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 부문에서 제시한 더 높은 급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보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한편 제보자들이 소속 기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가 3,000명 이상의 조세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후 한 의회 위원회는 해고로 인해 절약된 1£당 10£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보다 많은 자원과 직원을 추가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아프리카의 광산 부문 과세를 다룬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탄자니아 세입 당국은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과세분과를 창설한 후 1인당 연간 13만\$의 인건비가 소요된 반면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지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세입이 절실히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2012년 이후 약 1억 1,000만\$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조세 당국은 또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기업 기득권층의 로비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더불어 부패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문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메이저 회계 기업의 절대적 권력이다. 빅4 - PWC, EY, KPMG, 딜로이트Deloitte - 는 현재 9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EU 국가 전체의 조세 분과 고용인을 모두 합친 수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기업들은 종종 전직 조세 공무원과 정치인을 고용하여 사업과 정치 사이의 건강하지 못한 회전문을 구축한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에 적용되는 공정한 과세 제도는 조세 공무원이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문 직원이 희박한 빈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하다. 현재로서는 그 반대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특세로 인한 것인데 이 원칙은 조세 당국이 동일 다국적기업 자회사들 간의 거래를 마치 독립 회사들간의 거래인 양 다루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내부 거래 가격을 조작했다고 조세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그들은 거래의 정확한 사정을 밝혀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스스로 핵심 정보를 통제하며 많은 보수를 받는 변

호사와 회계사 군단을 소집하여 소송 변호를 맡길 수 있다.

훨씬 더 개선되고 단순한 접근법은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 구조에 적용될 때 독립기업 원칙은 전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에 대해 그들의 본모습인 단일 세계 기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될 것이다(현안 보고서 1 참조).

어떠한 조세 규칙을 마련하든 정부는 조세 당국에 직무 수행에 충분한 직원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세 행정의 역량 제고가 세입과 관련해 그 비용을 넘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는 직원 수의 대규모 증가를 의미할 것이다.

영국의 공공 및 상업 서비스 노조PCS 추산에 따르면 납세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각 세금조사관이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인건비를 제하고 약 650,000£(755,000)에 달했으며 가장 복잡한 조세 회피 사례와 싸우는 “특별조사과”는 비용의 450배에 이르는 생산성을 보였다.



“개발도상국은 더 많이 법인세입에 의존하지만 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한 물자와 인적 자원은 더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드제이 BERNARD ADJEI
가나 공공부문 노동조합 부의장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Taxation Office

노동조합 활동 사례

세무서를 탈세자들에게 위탁하기?

조세 징수는 국가 세입이 공익의 관점에서 징수되고 쓰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역량을 갖추고 엄격하게 독립된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세제 징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호주 국세청은 그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서코사Serco와 스텔라사Stellar, 그리고 아웃소싱사Outsourcing Inc.에 위탁했다. 이들이 호주 국세청과 체결한 계약은 모두 합쳐 2억 5,000만\$의 가치를 상회한다.

이들 회사들은 또한 일부 문제가 되는 재무 관행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및 공공부문 노조(CPSU, PSI 가맹단체)를 비롯한 호주의 노조들은 국제법인세책임조사센터(CITCAR)와 협력하여 해당 사안들을 조사했다.

이민자 구금과 민간 감옥 사업으로 유명한 서코사는 호주 국세청의 최대 용역공급사로 1억 2,000만\$의 가치를 상회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CITCAR의 조사는 서코사의 평판이 패러다이스 페이퍼스 세금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로펌 애플비사조차 “문제점과 실패, 치명적 오류와 부당한 대금 청구의 이력”이 있는 고위험 고객으로 여길 정도로 의심스럽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주 국세청 콜센터 계약에서 5,000만\$ 이상을 수주한 스텔라 글로벌은 최근 유럽 지사의 파산을 선언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사는 영국 조세 당국에 200,000\$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 수당 지급을 회피했다.

스텔라 유럽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모회사에 100,000\$ 이상을 지불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고서는 심층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CPSU의 사무총장 나딘 플러드는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주 공동체는 가장 좋을 때라도 외부 위탁과 민영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호주 국세청 계약이 자신들의 세무 관행이 의심 받고 있는 회사들에게 주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CICTAR 보고서에는 정책 입안자들을 향한 강력한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정부 계약자의 최종 모회사 및/또는 최종 실소유자 전면 공개와 모든 공공 계약의 완전한 투명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권고사항 중 많은 부분은 이후 호주 노동당의 핵심 정책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 전문을 읽거나 CITCAR가 어떻게 여러분의 법인세 캠페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CITCAR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기 바란다.

조세 당국은 또한 법인과 최고 부유층이 세금 회피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자국 시민의 자산 정보에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 정보교환”).

조세 당국은 또한 보다 광범위한 투명성으로부터 큰 혜택을 얻을 것이다. 회사의 실소유주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현안 보고서 7 참조) 다국적기업의 조세 관행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현안 보고서 1 참조).

미디어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가 기업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들은 자국의 조세 당국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대중이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또한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책 작동 여부와 방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정부의 행동을 촉발시킨 최근의 법인세 회피 스캔들 중 많은 경우는 내부자료 유출과 내부공익 제보자로 인해 알려졌다. 정부는 거대 회계 기업 PwC의 직원으로서 대규모 조세 회피에 회사가 공모했음을 폭로하고 그 결과 재판에 회부된 앙투안 델투르 및 라파엘 알레와 같은 내부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민영화와 탈세 - 연결고리 밝혀내기

민영화로부터 수익을 얻는 기업들 중에는 세금을 탈루하고 긴축을 심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매각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부각함으로써 노동조합은 민영화와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저항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다.

PSI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기업 구조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비위와 탈세를 탐지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한편 임금 협상과 민영화 의제 반대의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액티스사Actis - 영국에 본사를 둔 비공개 기업투자 회사 - 가 모리셔스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 회사를 이용하여 우메네사Umene - 민영화된 우간다 전기 공급자 - 의 이윤을 역외로 빼돌린다는 사실을 우간다 활동가들이 밝혀내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폭로 이후 우간다의 조세 당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워크숍에서 생산된 조사결과는 카리브해에서 스위스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의심스러운 재무 관행에 종사하는지를 폭로하는 PSI 보고서 - [<사적 이윤과 국고>Private Profits and the Public Purse](#) - 로 편집되었다.

노동조합 조세 저널리즘과 여러분의 캠페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교육 조직인 파이낸스 언커버드Finance Uncovered와 접촉해보기 바란다. 향후 워크숍 일정에 대해서는 PSI 의사소통 팀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communications@world-psi.org).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

1. 조세 당국이 모든 정부 부처 및 여타 정부 기관과 단체로부터, 또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조세 당국이 직원과 IT 인프라를 비롯해 충분한 자원을 갖추는 동시에 조세 법률과 정책을 시행 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과 법적 수단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조세 당국이 잘 훈련되고 좋은 보수를 받으며 의욕적인 동시에 지지적 근무 조건에서 일하며 인 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누리는 전문 직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국제노동기구(ILO)의 후원 하에서 타 정부와 협력하여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ILO 협약 을 창설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와 물리 보안을 제 공할 것이다.
5. 조세 당국이 그들의 관할 지역에 등록된 모든 회사와 신탁 및 그들의 실소유주에 관한 데이터베 이스를 보존하고 연간 재무 회계 기록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공식분배법에 따른 합산 과세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조세 행정을 단순화하고 효과성을 개선함으 로써 다국적기업이 단일 기업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7. 정보에 입각한 공적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재무 및 세무 상태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 간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조세 당국의 직무에 정당성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한다.
8. 가능한 경우 빈국 조세 당국의 역량 육성을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가능한 경우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원을 받는 조세 당국에 의해 설계 되고 주도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관계자들은 이해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유럽공공서비스노조 - 보고서](#)

[긴축이 세무 서비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 사기](#)

[회피에 맞선 싸움](#)

[국제법인세책임조사센터 — 보고서](#)

[호주 국세청의 외부위탁 서비스 및 용역 기업 조세 관행](#)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5

현안 보고서 5
KOREAN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조세피난처의 이용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조세피난처 이용 억제

부인과 부유층들은 수십억 달러를 조세피난처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고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국고 세입을 감소시킨다. 조세피난처는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민간 부문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추산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세계 민간 가계 재산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활동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해결 과제: 부의 역외 은닉처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조세피난처에 대한 모든 지불에 대해 보다 높은 원천세를 부과한다
2. 조세피난처 종식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지원한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금 회피자 일부를 포함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해외 이윤의 절반 이상을 조세피난처에 기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일부 조세피난처는 거의 완전한 금융 비밀주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최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장부에서 지우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조세피난처의 비밀주의는 또한 많은 부패 및 조직적 범죄와 결합되는 동시에 역외 부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 부를 이용하여 민주적 정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조세피난처의 존재는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기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이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업과 최고 부자들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 납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자와 여타의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피난처의 비밀주의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검은 돈”의 역할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을 제기한다. 예컨대 패러다이스 페이퍼스는 극우 억만장자인 로버트 머서가 [버뮤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보강해주고 이를 통해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일조했다.

1 Gabriel Zucman.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The scourge of tax havens. Slide presentation, 2015(국역: 오토르망 율김, 『국가의 잃어버린 부 — 조세피난처라는 재앙』, 앨피, 2016)



조세피난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조세피난처는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국가 내의 영토나 주일 수도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공통된 특징에는 해외 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또는 영(0)세율, 자신의 조세 제도에 접근하는 대가로 실제 경제 활동이 조세피난처에서 일어날 것을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음, 종종 거의 불투명한 비밀주의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많은 조세피난처의 회사들은 회계보고서를 발행하거나 그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

조세피난처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갖는다. 화폐와 자산은 “저장용sink” 조세피난처에 모인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종종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먼 제도과 같이 작은 섬지역인 경우가 빈번하다. 부는 서류상으로는 그 곳에 있으며 비밀주의는 이 중 많은 것이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데 도움을 준다. 미디어에서 종종 조세피난처로 이들 열대의 섬들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상 돈을 역내에서 세계 금융 중심지들이 또한 포함되는 역외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세계 네트워크의 점들에 불과하다. 역외 금융의 개념은 그 핵심이 모두 투자유치국의 세금과 규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운용의 요소들을 물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저장용” 조세피난처의 돈을 제3국으로 흘러보내는 “전달용conduit” 조세피난처는 종종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국들이다. 다국적기업들에게 이러한 “전달용” 조세피난처로 가장 큰 곳은 네덜란드이며 아일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일부 주들(특히 델라웨어주)은 미국 내의 조세피난처로 기능한다. IMF 연구자들은 최근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거의 40%가 이들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진 사실상의 “유령” 투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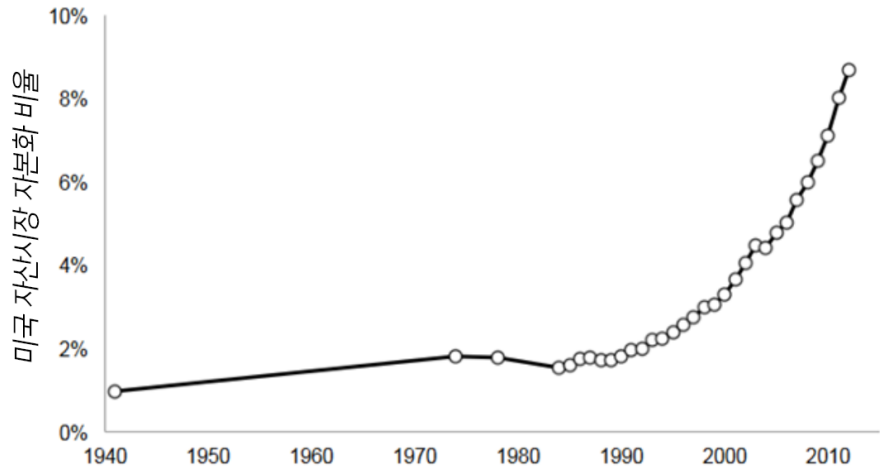
역외 제도의 창설을 선도한 영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왕실령(저지섬 포함)과 해외 영토(BVI, 케이먼 제도, 버뮤다 포함)로 구성되는 역외 조세피난처는 영국의 세계 금융 중심지인 시티오브런던의 위성으로 역할하며 시티오브런던은 돈과 자산을 이동시키는 용도로 이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다.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영국을 세계 최대의 법인세 회피 여건 조성 국가로 여기고 있다.

스위스와 같은 몇 군데의 부분적인 예외가 있지만 조세피난처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조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실제 활동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의 주요 수혜자들, 즉 기업과 최고 부자들은 거의 이들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들은 “경제적 실질”에 관한 현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수의 직원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빈번한 경우 서류상으로는 존재한다.

조세피난처 사업 모델의 순 효과는 아일랜드와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서조차 경제와 정치를 왜곡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융 저널리스트 닉 샅슨 Nick Shaxson은 자신의 책 『금융의 저주』The Finance Curse에서 어떻게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장이 조세피난처로서의 장구한 역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서술한다.

조세피난처: 급성장 사업

조세피난처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미국 자산



In 2012, 9% of the U.S. listed equity market capitalization was held by tax haven investors (hedge funds in the Cayman Islands, banks in Switzerland, mutual funds in Luxembourg, individuals in Monaco, etc.). Source: author's computations using US TIC data

다국적기업들은 회계 속임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키고 그들이 실제로 이윤을 얻는 국가가 제시하는 세금 고지 금액을 줄일 수 있다(현안 보고서 1: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 기업 과세 참조)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다국적기업들이 해당 거래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통상 불투명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은닉된 것이다. 예컨대 다국적기업들은 통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것을 비롯해 자회사 목록 제출을 요구받지만 각 자회사가 보고하는 이윤의 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현안 보고서 5: 국가별 공개 보고서 참조).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대응규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국가 조세 당국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을 위해 일하며 많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에 맞서 조세 규칙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바탕으로 각 거래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현안 보고서 3: 조세 당국의 강화 참조).

대형 세금 사건은 해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다국적기업이 싸우기로 마음을 먹으면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 회피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적어도 최근까지) 많은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태도와 결합되어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비밀주의는 부패 자금과 조직 범죄 수익금, 그리고 최고 부자들의 탈세 은닉처라는 조세피난처의 또다른 주요 용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궁극적 소유자가 공개될 필요가 없는) 익명의 회사는 대형 부패 음모의 표준적 구성요소이다. 그러한 회사들은 부당 이득과 뇌물 지급을 숨기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들과 일부 법인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

기업 뇌물은 그것이 계약을 보장할 때조차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뇌물은 공무원들을 공중이 아닌 민간의 기득권층에게 복무하도록 만들며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뇌물 비용을 만회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 억제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기업과 최고 부자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소요되는 국가 세입을 빼앗는다.
2. 조세피난처는 조세 제도를 불공정한 것으로 만들며 수익금이 은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밀주의는 부패와 조직 범죄를 조장한다.
3. 기업은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킨 다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요구를 충족시킬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

지난 수십 년간 조세피난처의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 왔다. 1998년 이후 문제를 억제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도는 미국의 반대에 막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OECD에 의한 가장 최근의 시도인 소위 세원잠식 및 이윤이전(BEPS) 프로젝트(2013~2016년)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독려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BEPS는 너무나 복잡해(새 지침서는 수백 쪽에 달한다) 종종 적용하기 어려우며 세금 회피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된다(현안 보고서 도입: 왜 기업 과세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가 참조).

BEPS 과정 중에 합의된 해법에 기댈 의지가 없는 일부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일방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영국과 호주는 이윤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최근 “우회이윤세”를 신설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대 초반부터 기업이 다른 조세피난처에 지불한 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나라 중 일부는 낮은 세금 관행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기업 세금 피난처 중 한 곳이며 영국은 자국 왕실령과 해외 영토를 중심으로 역외 조세피난처 제도가 수행한 거대한 역할을 억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정부간 조세 정보의 교환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세 당국은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자국 시민들의 해외 자산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현안 보고서 6 참조). 조세피난처의 경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일부 국가들은 또한 공공 등록제도를 통해 최종 실소유자(회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를 공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기 시작했다(현안 보고서 8: 회사와 신탁, 재단의 실소유자 공개 참조).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들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리스트는 종종 매우 정치화되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는 강력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정치적 동기로 얼룩진 부조리로 마감될 것이다.

예컨대 EU의 블랙리스트에는 2019년 중반을 기준으로 12개의 나라 또는 영토만이 포함되었다. EU 소속의 조세피난처국과 카르브해의 주요 조세피난처들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매우 약하고 완만만 개혁을 대가로 리스트 등재를 벗어났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일은 다소 복잡해졌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역외 이전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조세피난처들은 개혁에 저항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새로운 전술은 변화를 약속하되 최대한 먼 미래로 이를 미루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일부 역외 영토들은 회사의 최종 실소유자 공공 등록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의 시행은 2023년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이러한 와중에 전세계의 국고 수입에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OECD는 세계 공용 최저 실효세율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개혁을 검토했다. 이는 한 관할지역이 기업 이윤에 대해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을 경우 다른 관할지역이 최저 세율까지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같이 세율이 낮은 관할지역이 자신들의 세율을 최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이에 적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계 공용 최저 실효세율은 BVI와 케이먼 제도와 같은 비과세 조세피난처의 사업 모델을 위협할 것이다.

세계 공용 최저 실효세율은 세금 회피 및 초저과세 일반에 맞서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접근법이 약하게 설계될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최저세율이 너무 낮거나 많은 예외를 두는 경우 보다 많은 세금 징수는 실패할 것이며 현행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심지어 기존 세율을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저세율 제도의 세부사항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최저세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의 무력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시행을 둘러싼 장기적인 정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EU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관할지역의 수

64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법인세 피난처 지수에
등재된 관할지역의 수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은 이미 조세피난처 대응규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통상 기업 이윤의 역외 이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조세 당국에 부과하며 이는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지불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될 규칙은 (다른 곳에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피난처 이용을 저지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규칙은 현재 OECD에서, 또는 IMF와 같은 기타 주류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조세피난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지불에 대해 보다 높은 원천세를 부과함으로써 화폐나 자산을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비경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기업이 세금 고지 금액에서 조세피난처 관계사에 지불된 임의의 비용(이자 납부, 로열티, 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회사의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공공조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윤이 장부에 기입되고 계약을 준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전세계 모든 정부가 자국 시민들의 해외 자산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보를 받는 대가로 다른 국가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최빈국의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5. 회사의 최종 실소유자 및 자산을 은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신탁 등 여타 기업수단의 최종 실소유자에 대한 최신의 포괄적 정보를 기록하는 공공 등록 제도를 모든 국가와 영토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
6. 국가 조세 당국에 충분한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우간다: 조세피난처 연결고리의 폭로

우간다의 노조들은 오랫동안 해외 기업에 의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와 기업 탈세가 국고 세입에 미치는 파멸적 효과에 대항해왔다. PSI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회원 노조들은 이러한 쟁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밝혀내고 일련의 행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저널리즘 교육 조직인 파이낸스 언커버드와의 협력을 통해 이 조사는 어떻게 영국의 비공개 기업투자 회사인 액티스사가 우간다의 민영화된 전기 공급자인 우메네사 투자 과정에서 역외 조세피난처인 모리셔스의 지주회사를 이용했는지 밝혀냈다. 우간다의 실효 법인세율이 30%인 반면 모리셔스는 3%에 불과하다. 한 때 액티스사는 논란이 있는 영국의 국제 개발 부서의 투자 기관인 커먼웰스 개발 회사(CDC)에 속해 있었다. CDC는 민영화를 장려했으며 이는 빈번하게 영국의 기업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액티스사는 우메네사 참여를 통해 100만\$를 상회하는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다. 이들 이윤 중 상당 금액이 이윤이 발생한 우간다가 아니라 모리셔스에서 과세되었을 개인성이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3,800만\$를 상회하는 국고 세입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보건 예산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간다 조세 당국과 접촉해 이러한 쟁점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액티스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재개했다. 민영화와 탈세의 연결고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SI 보고서 [<사적 이윤과 국고>Private Profits and the Public Purse](#)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알아보기

CICTAR

역외 조세 회피에 관한 사례 연구는 국제법인세책임조사센터를 참조하라.

CICTAR는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세계 연구 센터로 다국적기업의 조세 관행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노동자와 여타 시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인세 회피에 관한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업 캠페인이 조세의 관점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세 캠페인에 사용할 기업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jason.ward@cictar.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웹사이트: www.cictar.org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세정의네트워크(TNJ)는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비롯해 국제 조세와 금융 규제 분야의 연구, 분석, 권익보호 활동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국제 네트워크이다. 웹사이트는 조세정의를 위한 싸움과 관련된 최신 연구 및 정기 뉴스를 제공하며 시민사회가 활용하기에 알맞도록 제작되었다.

웹사이트: www.taxjustice.net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6

KOREAN

현안 보고서 6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기업의 국가별 공개 보고를 요구한다



국가별 공개 보고

해결 과제: 기업의 이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세계 교역의 적어도 3분의 1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자회사들의 상호 구매와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거래는 공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 회사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사실상 내부 거래는 쉽게 조작되며 이를 통해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킬 수 있다.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게 이윤과 납세 현황,
기타 핵심 재무 데이터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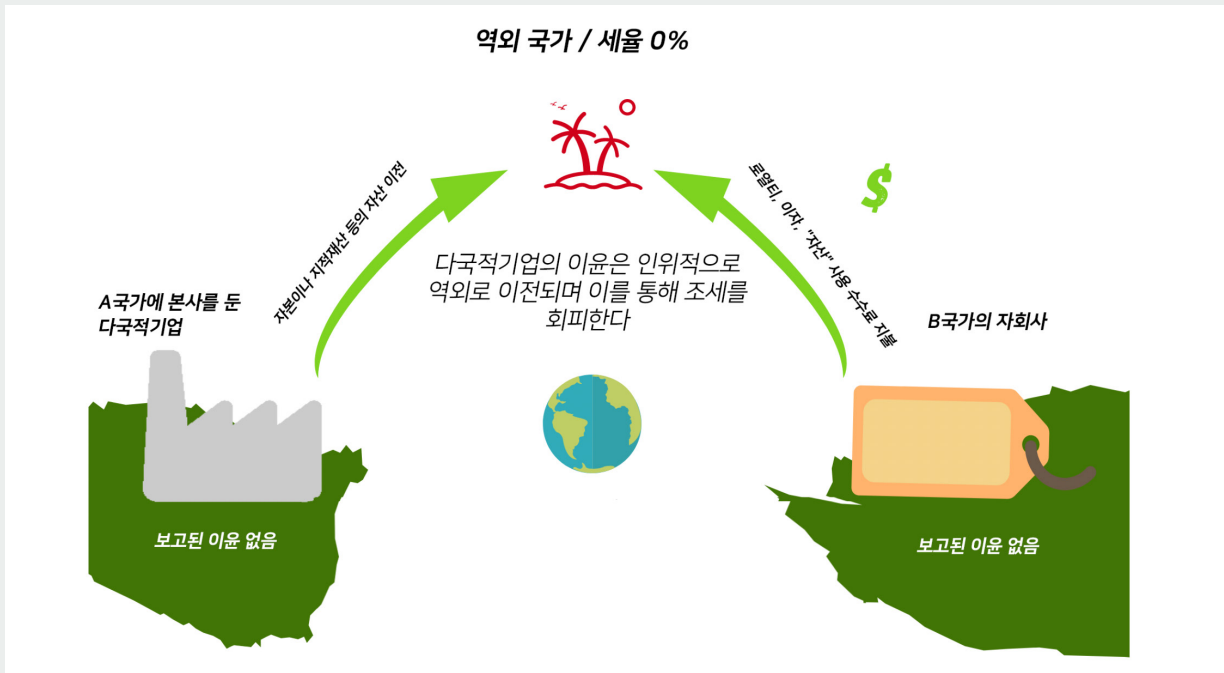
“이전가격 남용”의 고전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다국적 회사의 한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이어서 이 조세피난처의 회사는 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이 조세피난처에 모이게 된다.;
2. 자회사는 예컨대 브랜드나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대부 이자, 또는 경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에 지불한다. 조세피난처가 지불 대금의 총착지가 되는 동안 이 모든 비용은 자회사의 이윤에서 공제되며 그리하여 사업 수행 국가의 세금 고지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업 이윤의 역외 이전은 보건과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세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돈을 치워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윤이 역외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조세 당국이 세입을 징수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 역시 공정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이윤의 이전이 “효율적인” 조세 행동이며 이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조세 당국과 노동자들의 것을 공히 빼돌리기 위해 동일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 가격 조작: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국적기업은 자본이나 지적재산(IP)(예.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의 소유권을 조세피난처의 회사에 둔다. 조세피난처의 회사는 이들 자산을 사용한 대가로 B국가의 자회사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경비의 후자의 B국가의 세금 고지 금액에서 공제되며 화폐의 증착지는 조세피난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윤은 그것이 창출되고 생산된 곳(생산국가와 소비국가)으로부터 어떠한 실제적인 경제 활동도 일어나지 않은 역외 피난처로 이전된다.

이러한 종류의 남용에 조세 당국이 대처하기는 어렵다. 조세 당국은 어떤 거래에서 가격이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거래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조세 당국은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때로는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주요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회계 기록이 진행되는 사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세피난처의 경우 회계보고서 발행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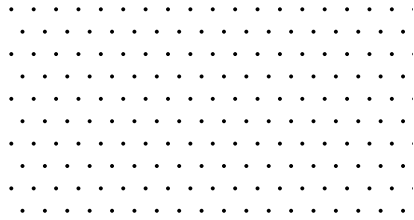
회계보고서가 발행되는 곳에서도 다른 자회사를 오가는 커다란 현금 흐름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현재 전역 회계에서 국가 수준의 세부사항을 발행하거나 모든 자회사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 기준 역시 다국적기업의 주식이 등재된 지역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컨대 많은 나라에서 지역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회사들에게는 회계보고서 발행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사가 회계보고서를 발행하는 영국에서조차 이러한 회계 기록에는 동일 다국적기업 자회사들 간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거의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나는 탈세가 도덕적 사안, 인권의 사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이사





지금까지의 경과

제도는 오랫동안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수년간 정부는 기업 로비스트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중적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마침내 “국가별 보고”를 위한 세계 기준을 개발했다.

국가별 보고 회계 기준 원안은 시민사회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2003년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이 매년 이윤과 납부 세금을 비롯한 핵심 정보를 사업 수행 국가 또는 관할지역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 요약서 참조). 이러한 보고서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인이나 유형 자산이 거의 없는 관할지역에서 다국적기업이 과도한 양의 이윤을 기장하는 시점 — 이는 조세 회피의 고전적 징후이다 — 을 보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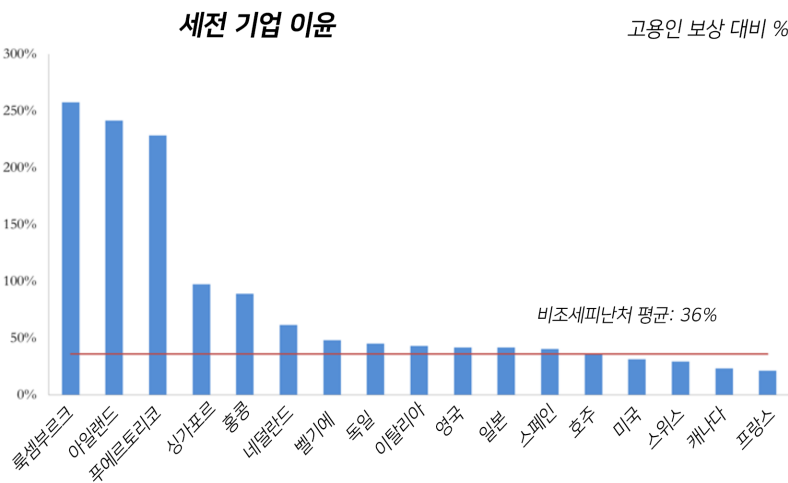
이러한 보고 형식이 그 자체로 법인세 회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 규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보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활동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탈세 기업 및 탈세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에 대한 대중적 압력의 동원을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의 국가별 정보 공개를 도입하였으며 초기 분석은 이로 인해 납세액이 10%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OECD는 강대국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들 정부 중 일부는 여전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미온적이다. 결과적으로 OECD 기준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내놓은 정보 공개 기준의 새로운 안은 OECD 모델에 대해 기술적으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과 통신사 [보다폰](#)이 유럽의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 그러했듯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자체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국가별 공개 보고가 일부 로비스트들이 주장하듯 기업의 사업활동을 무력화시키거나 일 자리를 위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룩셈부르크 등의 조세피난처에 기장한다



출처: Zucman, Tøsløv and Wier. The Missing Profits of Nations. July 2018

금융 기관의 보고 요건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노르웨이와 캐나다처럼) 석유, 가스, 광물 회사에 대한 보다 제한된 형식의 국가별 공개 보고를 채택했다. 2018년 중반 EU는 이러한 보고를 여타 경제 부문의 다국적 기업으로 확장하는 [제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는 여러 예외 및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세 관행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용될 여지가 있다.

OECD 기준: 핵심 쟁점

1. OECD 기준은 이러한 국가별 보고서를 공중이 아니라 조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공개 보고 없이 기업 탈세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 보고 없이는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역외로 숨겨둔 채 그들의 고용인들에게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작업장을 폐쇄하고 일 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닌지 노조가 확인할 방도가 없다.
2. 기준은 오직 750M 이상의 매출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는 최저한도를 낮추라는 조세정의 캠페인의 압력에 OECD가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중간 규모의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이 어떻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3. 보고서는 OECD가 설계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국가 조세 당국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최빈국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 OECD 시스템에 서명한 대략 70개의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5개국에 불과하다. 필요할 때 언제나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은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4. OECD 기준은 다국적기업군의 내부 거래를 제3자 거래와 분리하지 않으며 보고서가 기업의 전역 회계와 일치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회사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는 제한된다.

The image shows the Chevron logo, which consists of the word "Chevron" in a bold, sans-serif font above a stylized chevron symbol. The chevron is composed of two overlapping shapes: a blue one on top and a red one on the bottom, both pointing downwards.

노동조합 활동 사례

쉐브론: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로지르는 노조 역량 육성

석유 다국적기업 쉘브론사와 호주의 제휴 계약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유의미한 대화 참여를 거부했을 때 노조는 이를 간의 파업으로 절정에 달한 일련의 행동을 전개했다. 쉘브론사가 20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노조를 법정으로 끌어들이었을 때 노조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로지르는 여러 노조들과 협력하여 공정한 몫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쉘브론사가 어떻게 의심스러운 조세 음모를 꾸민는지 폭로했다. 2015년 PSI와 ITF, 그리고 조세정의네트워크 호주 지부는 쉘브론사가 과세되지 않은 350억\$ 이상의 소득을 역외 계좌에 은닉한 사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연방상원 청문으로 이어져 쉘브론사의 임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정치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들은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노조의 조사에 응답해야 했다. 또한 조세피난처 이용으로 15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납세액을 줄일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2017년 쉘브론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국세청과의 협상을 타결짓고 10억\$를 미납 세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백만 달러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주도한 이 캠페인은 쉘브론사의 세계적 세금 고리를 밝히는 데 일조했다. 특히 네덜란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의 이용은 네덜란드 노조가 참여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어 그들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사를 상대로 한 [역사적인 조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례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동원되는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대해 노조는 국경을 가로질러 캠페인 활동과 조사를 연계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전투적인 행동과 산업재판소에 의존하기보다 참여 노조들은 쉘브론사의 재무 행동에 직접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토록 중요한 거대 기업의 세금 납부에 일조함으로써 노조는 그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세금이 노조 역량을 육성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쉘브론사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은 향후에 있을 노조와의 싸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기존의 회계 규칙은 이윤과 납세 현황을 국가별로 분류할 것을 다국적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세금 회피를 보다 쉽게 은폐하도록 만든다.
2. 조세 회피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의존하는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입을 국가로부터 빼앗는다. 여성들은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국가별 보고를 통해 기업이 어디서 이윤을 얻고 세금을 납부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세금 회피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윤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4. 투명성 역시 기업의 공정한 납세 부담을 요구하는 대중적 압력을 일으킴으로써 조세 당국에 도움을 주고 조세 제도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모든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를 회사 웹사이트에 발행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정부는 모든 보고서들을 한 곳에 모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국제 기준은 GRI의 조세 기준이다. OECD와 모든 나라들은 이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3. 다국적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세계 노조 연맹과 전국 노조들은 세계 기준 협약 Global Framework Agreements 및 단체교섭 협약에서 GRI 기준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4. 발행되는 보고서는 보고서의 분석 및 비교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방형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 규칙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가별 보고서는 상이한 숫자들이 상응하는 방식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업의 전역 회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5.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국적기업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보고서 발행 의무를 갖는 기업의 최저한도는 현재의 최소 7억 5천만 의 세계 매출에서 1억 또는 1억\$와 같은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조정되어야 한다.
6. 해외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매년 대형 국내 소유 회사와 해외 소유 회사별로 총소득과 과세 소득, 납부 세액을 발행하는 호주의 사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 활동이 아닌 기업 이윤과 세금에 대한 제한적인 그림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완전한 국가별 보고서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는 부당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대중적 압력을 일으키는 유용한 방식이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세금 조사가 노인돌봄의 질을 높인다

호주 간호 조산 연맹 The Australian Nursing & Midwifery Federation (ANMF)은 노인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간호사-환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 하지만 민간 부문 회사 대표들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충분한 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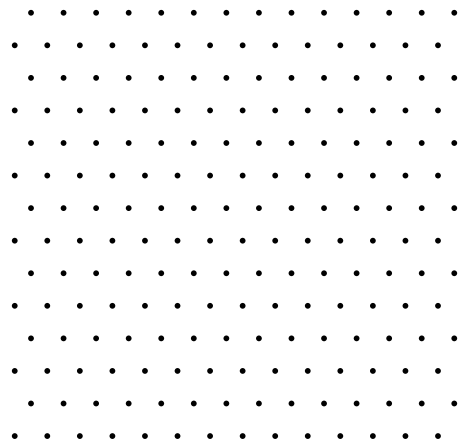
이에 대응해 ANMF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많은 양의 정부 기금을 받는 민간 노인돌봄 공급자들이 어떻게 이윤을 역외로 이전하는지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 일주일 만에 보고서는 공식적인 연방상원 조세 청문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부파사 Bupa, 알리티사 Allity, 오팔 요양병원 Opal Aged Care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어떻게 고도로 복잡한 다국적기업 구조를 이용하고 관계사 대출을 수시로 받아 이윤을 역외로 빼돌리는지 그 윤곽을 제시했다. 전세계 정부들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외부 위탁은 치솟는 비용, 서비스 품질의 악화, 의심스러운 조세 관행이 대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면서 점점 사방의 공격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왕립 노인돌봄 위원회를 통해 빈약한 돌봄과 영양, 불충분한 직원 채용 등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분노가 증폭되었다. 이같이 불량한 수준의 노인돌봄은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영리를 추구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원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기업 구조에 대해, 또한 이들 회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수백만 달러에 대해 노인돌봄 공급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애니 버틀러, ANMF 연맹 의장

캠페인 및 세금 관행의 폭로 결과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답이라는 견해는 점점 줄어들고 자격을 갖춘 직원의 총원과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알아보기

유럽공공서비스노조 - 보고서

세금조사관이 국가별 공개 보고를 원하는 6가지 이유

<https://www.epsu.org/article/six-reasons-why-tax-inspectors-want-public-country-country-report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세금 및 납부에 관한 GRI 기준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tax-transparency-investors.aspx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

국가별 보고서를 다룬 조세정의네트워크 웹 페이지

<https://www.taxjustice.net/topics/corporate-tax/country-by-count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7

현안 보고서 7
KOREAN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자동 정보 교환을 요구한다

자동 정보 교환

해결 과제:

최고 부자들의 역외 자산 찾기

조 세피난처는 부유층이 역외로 이전한 세계 금융 자산의 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보건과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재원을 조달하는 세입에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한다. 조세피난처의 비밀주의 또한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막대한 몫을 최고 부자들이 가져가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불평등을 한층 증가시키는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정책을 포섭하는 데 이용되는 부와 권력을 집중시킨다.

핵심 사항 :

노동조합은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조세 당국이 부유층의 역외 자산을 발견하고 이에 과세할 수 있도록 자국 시민들의 해외 자산에 관한 조세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

조세 당국은 오랫동안 민간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고전해왔다. 한 부유한 시민이 다른 국가나 영토에 현금이나 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조세 당국은 해당 관할지역으로부터 힘들게 정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해당 관할지역이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뒤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세 회피자를 추적하기 위한 조세 당국의 자원이 부족한 중하위 소득 국가들의 경우 문제는 특히 어려워진다.

이는 부가 노동자들로부터 역외의 부자들로 이전되는 재분배가 모든 국가에 피해를 입히지만 세입이 절실히 필요한 빈국일수록 그 피해 효과가 그만큼 더 커지게 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조세 당국이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힘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2003년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운동은 적극적으로 이 캠페인을 지원한다.



	역외 재산 (단위: 10억\$)	역외 보유 금융 자산 비중	세입 손실(단위: 10억\$)
유럽	2,600	10%	75
미국	1,200	4%	36
아시아	1,300	4%	35
중남미	700	22%	21
아프리카	500	30%	15
캐나다	300	9%	6
러시아	200	50%	1
걸프만 국가들	800	57%	0
합계	7,600	8.0%	190

**조세피난처에
있는 막대한
규모의 부**

출처: Gabriel Zucman,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2015



노동조합 활동 사례

나이지리아 노동 운동이 조세 정의를 위해 결집하다

나이지리아의 노조들은 나라 전체에 걸쳐 매우 절실한 공적 개발 기금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매년 수입 면세로 3억 2,700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보건 분야 연방 예산 할당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금액이자 교육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입이 보전된다면 그것은 생산적 경제 부문에 투자되어 증가하는 점증하는 나이지리아 인구를 저개발과 빈곤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지리아 당국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중요한 원유 수출 대상국이지만 이러한 판매의 상당 부분은 네덜란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본은 종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관류한다. 악명높은 “네덜란드 더블 샌드위치” 기업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행동을 위해 PSI와 FES가 공공과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 나이지리아 노동의회를 결집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불법 금융 흐름과 탈세에 맞서 노조와 시민들을 동원하는 전국적 플랫폼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유의미한 언론 보도를 낳았으며 세금을 강력한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다.

플랫폼은 재무부를 압박하는 집회를 이끌었고 다국적기업의 본사는 공정한 몫의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에 의해 점거되었다. 또한 국제노조연맹ITUC 아프리카 지부와 더불어 노조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전개된 캠페인을 지원했다. 이 캠페인은 “피를 멈추어라 Stop the Bleeding”로 명명되었으며 특히 기업 탈세 목적의 불법 금융 흐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SI 보고서 [<나이지리아 조세정의>Tax Justice Nigeria](#)를 참조하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국적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우대책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세입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 인프라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이지리아인들, 특히 궁핍한 이들에게 사회 보호 혜택을 제공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불법 금융 흐름에 맞선 정부의 싸움이 노동조합과 광범위한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이지리아 세금 플랫폼 선언문 중
(PSI 공동 서명)

지금까지의 경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부자들의 해외 이윤 은닉을 보다 어렵게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금씩 진행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마침내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공통보고기준(CRS)을 개발했다. 이것은 외국 시민들의 은행 계좌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그들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본국에 자동적으로 전달할 것을 관할지역에 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국 시민들이 화폐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함으로써 자국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 조세 당국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RS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진전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의사결정권자들 공히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인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영국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하지만 OECD의 제도에는 주요한 문제들이 있다.

1. OECD는 조세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들에 대해 그들 역시 동일한 정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문제가 된다. 그것은 이들 국가의 경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자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OECD는 선별된 소수의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할 뿐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관할지역이 CRS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스위스와 같은 가장 비밀스런 관할지역 중 많은 곳이 CRS에 서명했지만 그들은 많은 저소득과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를 간단하게 거부한다. 미국은 서명 자체를 거부했다.
3. CRS에 서명하지 않은 일부 관할지역은 ‘투자 시민권’ 제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신의 부가 본국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부유층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CRS는 엄격하면서도 보다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세계의 국가 조세 당국은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받고 CRS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끈끈한 정치적 연줄을 가졌을 수도 있는 자국의 부유한 조세회피자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현안 보고서 3: 조세 당국의 강화 참조).

자동 조세 정보교환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조세 당국이 조세 회피자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부유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세가,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 탈세는 학교와 병원 등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에 쓰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킨다.
3. 화폐를 은닉할 수 있음으로써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며 이는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4. 자동적 정보 취득은 보다 많은 세입이 절실히 필요한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동조합은 CRS에 서명한 모든 관할지역이 서명한 여타의 모든 관할지역과 의무적으로 자동 정보공유를 하도록 공통보고기준을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자국 해외 시민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지만 상호교환 의무 적용 이전에 시스템 준비를 위해 5년의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체류 기간이 반 년 미만인 개인들이 납세 거주지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거주 증명서는 돈을 받거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CRS에 서명하지 않는 관할지역에서 납세 거주지를 구매함으로써 부유층들이 CRS를 회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국가 조세 당국은 보다 많은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받고 CRS 하에서 수령된 해외 은닉 재산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부유한 조세 회피자들을 추적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조세 정의 없는 젠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적 지출로부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조세정의를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성주의 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조세 논쟁이 쓸데없이 복잡해질 때 노동자와 지역 사회는 그 함의의 완전한 이해는 물론이고 논쟁 참여 자체에서 배제된다.

2016년 PSI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조세정의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강력하게 연계하기 위해 [젠더와 세금에 관한 최초의 세계 포럼](#)을 개최했다. 이것은 세계시민사회, 노동조합, 그리고 젠더정의단체를 함께 묶은 최초의 포럼이었다. PSI는 영국과 콜롬비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열린 일련의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대를 키워왔다.

법인세 회피의 대가는 너무나 빈번하게 여성들이 치르게 된다. 이것은 종종 기본 재화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연구들은 이것이 어떻게 젠더 불평등을 공고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젠더 규범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들이 돌보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본 재화의 획득에 지출한다. 이것은 (소득의 적은 부분만을 지출하는) 부자들과 세금 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과 대비된다.

공공 서비스에 충분한 재원이 조달되지 못할 때 여성들과 소녀들, 특히 소외되거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여기에는 양질의 무상 공공 보건의료, 물, 교육, 육아, 사회보호,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성과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 그리고 여성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안전한 공공 운수의 결여를 포함한다.

여성들은 무급의 돌봄 및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데 남성들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사회서비스에 공적 재원이 조달되지 못할 때 여성들이 떠안아야 하는 무급 노동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노조는 세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사안에 대한 필수 지식을 통해 여성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역량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조와 노조 내의 여성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자동 정보교환에 관한 최신 보고서는 해당 쟁점을 다룬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웹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s://www.taxjustice.net/category/policy/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

공통보고기준에 관한 OECD 공식 웹페이지: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mmon-reporting-standard/>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8

KOREAN

현안 보고서 8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실소유자의 공개를 요구한다

실소유자 공개

해결 과제:

숨겨진 소유자, 숨겨진 부

전 세계의 일부 관할지역은 회사 또는 신탁이나 재단 등의 기타 합법적 수단에 대해 이것을 최종 소유하거나 그 자산을 통제하는 사람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한 수단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범죄 자산 또는 부정한 금품을 은닉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 촉구해야 한다:

회사와 신탁, 재단 실소유자 공공 등록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회사나 신탁, 또는 재단의 최종 실소유자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회사를 통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 및 사기 음모는 법시행 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어렵게 하기 위해 종종 합법적인 일련의 익명 수단을 이용한다.

파나마 페이퍼스를 비롯해 외부로 유출된 조세피난처의 기밀 기록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전세계의 정치인, 사업가, 기타 유명 인사들이 익명의 회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역외에 숨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그들 자신의 나라는 이러한 부에 과세하고 교육과 보건 등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에 지불할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익명의 회사들은 또한 부패한 고위 공무원이나 통제주주들에 의해 이용되어 기업의 돈을 빼돌리고 잠재적으로는 이들 기업이 실패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익명의 회사는 부패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나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이 돈의 이동을 숨기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누군가가 익명의 회사를 소유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 이브라힘,
투자자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종 실소유자 —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 가 단지 내부자료 유출이나 내부공익제보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식 절차에 의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산의 최종 소유자를 은폐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신탁과 재단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조세정의 운동은 수년간 모든 국가와 관할지역이 회사와 신탁, 재단의 실소유자 등록제도를 설립하고 등록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종류의 공공 등록제도로 인해 부패한 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기업의 비밀주의 뒤에 숨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일정한 진전은 있었다. 석유, 가스, 광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사업인 채굴산업투명성조치(EITI)는 거의 50개에 달하는 시행 국가가 2020년까지 실소유자 공공 등록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은 이미 자체의 공공 등록제도를 채택한 상태이며 2018년 5월에는 해외 영토 — 여기에는 케이먼 제도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악명높은 조세피난처가 포함된다 — 가 향후 이러한 등록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세계 최대의 조세피난처이자 높은 수준의 비밀주의를 제공하는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주들이 회사의

익명 소유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어떠한 미 행정부도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만든 적이 없으며 그리하여 각 주들은 자금과 자산을 은닉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개방성의 확대에 저항하는 미국 외의 보다 작은 관할지역에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회사와 신탁의 실소유자 등록제도 설립에 합의했지만 신탁의 경우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등록제도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정보를 증명할 자원의 부족과 불이행을 처벌하는 제재의 부족으로 그 품질이 떨어진다.



**Multinationales,
payez votre part
d'impô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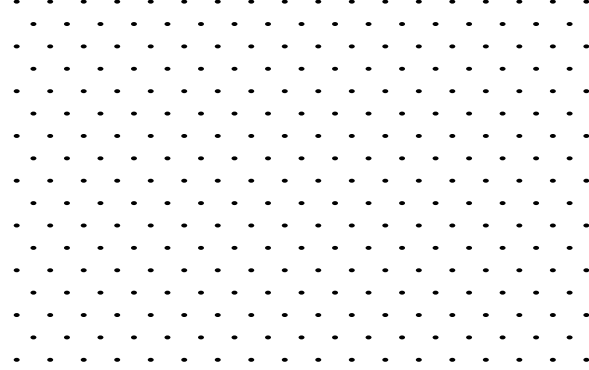


Alliance mondiale pour la justice

GlobalTaxJustice.org



Global Week of Action 19-23 June 2017 global
TaxJustice for #PublicS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다

PSI가 지원하는 국제 기업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ICRICT)는 최근 회사와 신탁, 기타 합법적 수단의 실소유 정보를 금융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소유 데이터와 연계하는 세계 자산 등록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세계적 등록제도가 금융 범죄에 맞서는 데 이용됨으로서 부에 대한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무엇을 어디서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유층과 기업의 의무적인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과세는 노동자와 여타 시민들에게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집과 차, 심지어 개의 소유까지 등록을 요구받는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투명성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회사와 신탁 소유의 은폐를 허용하는 관할지역은 역외 제도의 핵심 부분으로 이것은 또한 통상 소유의 은폐 보다

는 회계 게임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다국적기업에 의해서도 이용된다.

따라서 정부는 또한 기업과 최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키는 것을 저지할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안 보고서 3. 조세 피난처 대응 조치 참조).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동조합은 모든 국가와 관할지역이 해당 관할지역에서 창립되었거나 등록된 회사와 신탁, 재단의 최종 실소유자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등록제도는 포괄적이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포함된 모든 정보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2. 일부 국가의 경우 이것은 기존 등록제도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거나 그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경우 이것은 회사에 최종 실소유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은 또한 국가 조세 당국이 부유한 시민에 의해 해외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현안 보고서 3과 6 참조).



더 알아보기



조세정의네트워크

역외 비밀주의의 역할을 다룬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웹페이지

<https://www.taxjustice.net/topics/secretcy/the-mechanics-of-secretcy/>에서 찾아볼 수 있다.

ICRICT

ICRICT는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제 기구로 세계 자산 등록제도에 관한 현안보고서를 발행했다.

<http://psishort.link/ga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 투명성 연합 THE 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이 시민사회 연합은 소유권 비밀주의에 관한 자체의 웹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https://financialtransparency.org/issues/beneficial-ownershi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